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정책효과성 중심의 성과관리·평가로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 견인
 - 국정과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관리과제로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
 -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포상병행),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평가에 반영

- 미흡부진과제, 성과지표 개선·환류 강화로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
 - 성과관리의 적정성 제고와 정책성과 창출 지원·촉진을 위해 '법무부 성과on자문단' 운영 등 전문가 참여 프로세스 마련
 - 자체평가 단계에서의 단발성 참여를 넘어, 계획·실행·결과 환류 등 단계별 심층 컨설팅을 통해 성과관리 역량 제고
 -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을 통해 관리과제와 성과지표 간 체계성을 보강(지표 신설)하고, 미흡·부진과제의 정책 개선도 평가 강화(배점 상향)

- 현장 의견 수용성 심층 평가 및 자체평가위원 소통 강화
 - 현장 의견에 대한 단순 정량적 평가를 넘어, 의견 정책 반영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대한 심층적 통찰 및 실질적 개선 도출
 -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현장 방문 등 소통 활성화를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평가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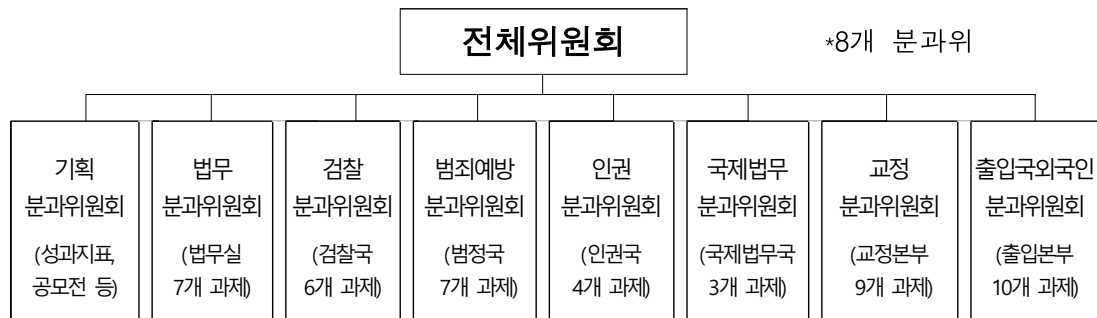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분과위 → 전체위) →
 ② 주요정책과제 추진(소관부서) → ③ 자체평가(분과위 → 이의신청→ 전체위)
 → ④ 성과 보상(포상, 성과급·인사 반영) → ⑤ 정책개선 환류(소관부서)

- (전체위원회) 전체 25명(외부전문가 18, 주무과장 7)의 성과관리 및 정책전문가로 구성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효율적 성과관리와 심도 있는 자체평가를 위해 법무·검찰·인권 등 7개 정책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분야 안전 검토·평가
- (법무부 성과on자문단) 7개 정책 분야별로 성과관리 전문가와 관련 분야 정책전문가 각 1인씩 매칭하여 성과지표, 미흡·부진과제 환류계획 등에 대한 개선 컨설팅 지원

※ ('24년) '정책성과 창출 지원 자문단' → ('25년) '법무부 성과on자문단' 으로 명칭변경



□ 평가방법

- (개요) 주요정책과제 이행계획과 실적보고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7개 등급으로 상대평가 실시
- (평가절차) ① 평가자료 작성(과제 소관부서) ② 관리과제별 1차 평가(분과위원회), ③ 종합 평가점수 및 등급 부여(총괄부서), ④ 이의신청, ⑤ 최종 평가등급 등 심의·의결(전체위원회)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총 46개 관리과제
 ※ 법무 7, 검찰 6, 범죄예방 7, 인권 4, 국제법무 3, 교정 9, 출입국·외국인 10
- (평가지표) 5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 ※ 가점항목 포함

평가항목	평가 지표	측정 방법 및 기준
계획수립의 적절성	1. 계획수립의 충실성	▶ 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대표성, 측정산식의 체계성 정도 등
시행과정의 적절성	1. 추진일정의 충실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부일정 준수 여부
	2. 협업 노력도	▶ 부서·기관 등과 협업하여 성과 창출 사례
정책 효과성	1. 성과지표 적극성 및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적극성과 달성도
	2. 정책 효과	▶ 장·단기적 정책효과,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안 대응 및 갈등 예방 성과 ▶ 국민체감 성과 우수사례
	3. 정책환류 성과	▶ 미흡부진과제 개선, 성과지표 개선의견 반영 등
정책 소통의 충실성	1.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 정책단계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도
	2. 홍보 노력도	▶ 언론보도 등 실적, 홍보 우수사례
	3.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 평가위원 등 정책전문가에 대한 소통 실적
가점	1. 국정과제 반영도	▶ 국정과제와 관리과제 간 연관성 및 기여도
	2. 전략목표 반영도	▶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관성 및 기여도
	3.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 자체평가위원 현장방문을 통한 소통 노력

< '24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4)
	성과지표의 적절성(8)
	추진일정의 충실성(7)
	협업 노력도(5)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25)
	정책 효과(30)
	정책환류 성과(5)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6)
	홍보 노력도 (홍보실적, 우수사례)(8)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2)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1)
	전략목표 반영도(1)
	핵심 민생과제, 협업과제 여부(2)



< '25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보완 추진일정 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 추가
	성과지표의 적절성(8)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보완 일정 지연 시 배점 기준 조정
	협업 노력도(5)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 조정 목표달성도 : 25 → 20점(△5)
	정책 효과(30)	
	정책환류 성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지표 신설 성과지표 개선의견 반영도(+4) 배점 조정 미흡부진과제 개선도 : 3 → 4점(+1)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세분화 (수렴 실적) 정량 절대평가 (정책 반영도) 정성 상대평가 * 24년은 실적 반영도 모두 정량 절대평가
	홍보 노력도 (홍보실적, 우수사례)(8)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2)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1)	
	전략목표 반영도(1)	
	핵심 민생과제, 협업과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삭제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1)	

2. 평가결과

(1) 총 평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마약, 중대재해,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기승하고, 인구·경제 등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 '25년도 총 44개 부서의 4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2개(4.3%), 우수 8개(17.4%), 다소 우수 7개(15.2%), 보통 15개(32.6%), 다소 미흡 7개(15.2%), 미흡 4개(8.7%), 부진 3개(6.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으로 평가됨
- 총 46개 관리과제의 80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75%로,
 - 7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일부 달성하지 못함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89.88%	94.38%	98.75%
총성과지표 개수	89개	89개	80개
총성과관리 과제수	48개	50개	46개

-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타국의 공조 이행 감소 및 인력 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국제형사공조 실적(건)	96.4	78.8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산식 : 한국요청 국제형사공조 이행률(이행건수/요청건수*100) + 외국요청 접수 국제형사공조 이행률(이행건수/접수건수*100) - 국제형사공조의 ① 요청(접수)건수는 국가별 공조 필요 사건 증가량 등에 따라, ② 이행건수는 요청받은 국가의 내부 사정 및 사건별 보완 필요 횟수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한국 요청 국제형사공조의 경우, 전년 대비 요청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행건수가 상대국 내부 사정 등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사정에 기인 - 외국 요청 국제형사공조의 경우, 전년 대비 접수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행건수가 동일 ※ 인력 사정 등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년도와 이행건수는 동일함

(2) 주요성과

-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10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매우우수(2), 우수(8)

①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I-1-①)

【 주요 성과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주가조작 범죄 엄정대응
 - ※ 퀀타피아, 엑스큐어 등 3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한 주가조작사범 14명 기소(8명 구속), 아튜브코인 사기 사건 총책(일명 ‘존버킴’) 2명 구속 등 금융증권범죄 엄단
- 전세사기 범죄 엄정 대응
 - ※ 조직적 범죄에 엄정 대응, 전세사기범 491명 구속, 3,172명 기소('22. 7.~'25. 11.)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중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엄단
 - ※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범죄조직을 집중 수사하여 총 1,094명 입건, 주요 조직원 444명 구속(구속비율 40.6%) 등

【 달성 원인 】

-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구성 ('25. 7.~12.)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및 전세사기 범죄수익 추징 보전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유관기관들이 보유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공유·분석하고 검찰·경찰이 신속하게 합동수사하여 효율적·종합적으로 범죄조직을 수사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I-2-①)

【 주요 성과 】

- 1:1 전자감독 관리체계 강화, 심리치료 초기면담 워크북 제작,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사례집 발간, 디지털분석 적극 실시 등 재범위험요인별 다양한 지도·감독기법을 활용하여 재범률 안정적 관리
 - ※ 특정범죄 재범률 : '22년 0.99% → '23년 1.09% → '24년 1.0% → '25년 0.94%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제도 시행 후 피해 사례 0건
 - ※ '24. 1. 제도 시행
- 강화형 장치 보급 확대 및 기존 장치 성능 강화로 훼손을 방지하고, 지자체 CCTV 연계 지속 추진 및 전자감독 수사팀 수사·검거 역량 강화

【 달성 원인 】

- 1:1 전자감독 확대 및 현장 중심 지도·감독 실시, 심리치료 및 정신질환 대상자 초기 개입 강화 등 위험요인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경찰청과 상시 업무협의를 통한 집행체계 개선 및 합동 모의훈련 정기적 실시,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개선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

③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II-1-③)

【 주요 성과 】

- 범죄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일상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범죄피해자 회복 중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 ※ '26년도 예산(+33.6억)에 반영
- '25년 3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조금 산정 시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20%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
 - * 지급대상을 영주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까지 확대
- 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1인 기준 10만원 증액(60만원 → 70만원)하였고, 지급기간도 2배 연장(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하여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생계 지원을 강화
 - * 범죄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맞추어 매월 지급(최대 12개월)
-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지원, 전국 호우 피해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등 대형사고·재난 등 상황에서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실시
 -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법률), 스마일센터(심리) 등이 법률상담, 소송구조, 심리지원 등 약 15,000건 지원

【 달성 원인 】

- 범죄피해자와 현장 지원기관, 유관기관 의견 지속적 수렴, 정기적인 내부 협의체 운영 등 단편적·기관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지원 체계로 전환
- 정책을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고, 단편적 사업 확대가 아닌 제도 전반의 연속적 재설계 관점에서의 범죄피해자 회복 중심의 정책 모델로 체계화
 - ※ 범죄피해구조금, 긴급 생활안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365스마일 등이 국정과제 세부 이행과제로 구체화되었고, 기획예산처, 국정기획위 등 협의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핵심 과제 대부분이 '26년 예산에 반영

④ 성폭력이상동기 범죄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Ⅲ-2-⑧)

【 주요 성과 】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재범 경험', '피해자 공감' 등 심리치료 효과성 제고
- 고위험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SNS를 통해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적 위기 진단' 도입, 유관부서 간 심리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대상자 모니터링 등 수용자 심리상담 체계 개편을 통한 상담의 실효성 강화
- 외부상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찾아가는 심신케어', 교정사고 발생 직후 심리적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심리지원 고도화(추수상담 제공) 등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달성 원인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회의, 워크숍 등 소속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심리상담체계 개편을 위한 심리치료 업무지침 개정 및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정책 확대

⑤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Ⅳ-1-①)

【 주요 성과 】

- 외국인의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25. 2.)
※ '25. 2. 24.(제도 시행일)부터 '25. 12. 31.까지 4,551,399명 이용(이용률 38.74%)
※ 행안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은상(국무총리 표창) 수상
- 국내 경제단체(6곳)에서 추천한 외국인 기업인 및 동반인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전용 입국심사대를 시범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외국인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기업투자 지원('25. 8.)
-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기존 4개국 → 18개국*) ('25. 12.)
* (기존)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확대) 좌동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 달성 원인 】

-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외국인 기업인 입국편의 증진 방안 마련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시 외부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국 국민 입국심사 수요, 상호주의·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선정

(3) 개선·보완 사항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미흡(4), 부진(3)

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I-1-③)

- 소관부서의 관리과제 변경('24.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25.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대응)에 따라 정책환류 성과 및 홍보 등 대외적 성과 부족
- 연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영방송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증대

②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I-1-④)

- 업무 특성상 외교관계, 상대국 여건, 국제정세 등 다양한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는 등 평가를 위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아 국제형사협력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미·중·일 및 인접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신속한 해외 소재 증거 수집 및 범죄인 송환 지속 추진하며, 사법공조 관련 한국요청과 외국 요청 사건의 난이도 부여 등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검토

③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I-1-⑤)

- 하반기 국정과제에 맞춰 '25. 하반기에 수정·변경된 과제로서, 홍보 등 실적에 필요한 기간이 다소 부족
- '26년 상반기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현장 의견 수렴·다양한 홍보를 통해 실적 개선

④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I-2-⑤)

-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확충,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 AI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 등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및 홍보가 다소 미흡
- AI 기술 도입 확대, 여성 정신감정 재시행 등 치료환경 개선 성과와 피치료감호자 재범 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추진

⑤ 수형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Ⅱ-2-①)

- 교정시설 확충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평가를 위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아 성과 측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정시설 조성 정책에 대한 자체·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주민간담회 등 적극적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갈등관리 노력

⑥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수용관리 및 접견 서비스 활성화(Ⅱ-2-③)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실시 및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신청 등 준비 미흡으로 인해 일정 지연
-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 및 성문인증시스템 도입 등 철저 추진

⑦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Ⅱ-2-④)

- 가석방 확대의 취지와 달리 국민적 반감을 유발하는 등 선제적 홍보에 대한 한계 존재
- 정기간행물에 분류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가석방 심사 등 전문 업무에 대한 설명형 기고·리플릿 배포 등 홍보 다각화 노력을 통한 국민 인식 개선

(4) 평가결과 종합

과제 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우수
2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보통
3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진
4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및 해외 소재 증거 확보	부진
5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부진
6	능동적 범죄대응 및 부패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다소미흡
7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매우우수
8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보통
9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보통
10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보통
11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미흡
12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우수
13	범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다소우수
14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우수
15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보통
16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매우우수
17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다소미흡
18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미흡
19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우수
20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수용관리 및 접견 서비스 활성화	미흡
21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미흡
22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보통
23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다소미흡
24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보통
25	성폭력이상동기 범죄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우수

과제 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26	마약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다소우수
27	미래번영 및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민법」 전면 개정 등 추진	다소우수
28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보통
29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보통
30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보통
31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보통
32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사법 개정	다소미흡
33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다소미흡
34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보통
35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차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다소미흡
36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제도개선	다소우수
37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우수
38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혁신적인 비자정책 추진	우수
39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 및 보호 업무 체계 개편	다소우수
40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다소우수
41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우수
42	성장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다소미흡
43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보통
44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보통
45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보통
46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다소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우수
---	---------------------	----

(1) 평가결과

주요성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운영

- '25. 7. 16. 대검을 중심으로 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구성
- 검찰 및 금융당국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주가조작 범죄 공동 대응방안 마련('25. 7.~12. 매월 회의 개최, 총 6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보고서 제출
 -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 11. 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등 수정안 심의·의결

○ 합동대응단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주가조작 사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현)

-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의 신속정확한 부과를 위한 실무협의체인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 구성('25. 11.)
 - ※ 합동대응단 신청 행정영장 2회 청구·발부,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및 대출비리 등 금융·증권범죄 사범 94명 단속, 23명 구속('25. 1~11.)

○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범 및 조세포탈 등 국가재정비리 사범 엄단

- 설탕가격 담합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입찰 비리 등 불공정거래 사범 7명 구속('25. 1~12.) 등 엄단
- 서울북부지검 조세부 및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자료상 등 조세포탈 사범 22명 단속, 2명 구속('25. 1.~11.)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 엄정 대응

- 전국청 전담검사 등 활용,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범통제, 실질적 보완수사 및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조직적 범죄에 엄정 대응, 전세사기범 491명 구속, 3,172명 기소('22. 7.~'25. 11.)
- 범정부 특별단속기간 중 143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여 51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선고, 차명재산 29억 원을 특정 및 추징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중심 보이스피싱 엄단

- 합수단 중심으로 범죄조직 및 상위조직원 집중수사, 지속적인 합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26. 7.) 및 정식 직제화 확정('26. 상반기)

※ 출범~현재 총 1,060명 입건,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 420명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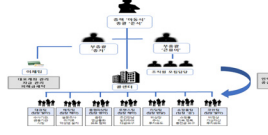
- 유사 수사 사례에서 도출 가능한 수사 착안사항,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 수사를 위한 대응방안 등 정리하여 전국청 전파

○ 해외 범죄조직 대응 위한 국제공조수사 및 ‘썬센터’ 통한 예방활동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 위해 전담수사관 2명을 필리핀 국가수사청에 파견하여 현재까지 도피사범 39명 검거

-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판별하는 ‘썬센터’ 확대 운영

※ 월평균 상담건수 '24년 2,291건에서 '25년 6,718건으로 2.93배 증가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 중심으로 몸캠피싱팀, 로맨스 스캠팀, 주식팀, 이체팀 등 역할 나누어 조직적 범행한 기업형 범죄조직 수사(18명 구속 기소) ○ 로맨스 스캠과 ‘SPACE X’ 투자 사기를 결합한 신종 기망 수법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체 수사(11명 구속 기소) ☞ 합수단은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 역량을 결집한 원팀수사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적발하여 실제 규명함으로써 범죄조직 엄단 	 <p>사실 정말 간단해. 이모가 엘론 머스크 로켓 발사 프로젝트 부서장 이라서 로켓 발사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 우리는 이모 지시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로켓 지 분만 사면 돼. 로켓이 우주에 도착하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속

○ 보이스피싱 국외도피사범 추적 및 외국인사범 검거 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지속 강화 필요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타격을 위해 주요 범죄조직 거점국인 중국 및 최근 범죄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수사관 파견 확대 추진하여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수사 역량 강화

- 대통령실 주재 ‘초국가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회의’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총책급 신속한 사법처리 방안 협의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다소미흡	·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소통계획 등이 다소 미흡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금융·증권, 공정거래 및 조세 범죄 등의 엄단 노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하게 설정하고 측정 산식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14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2개 부진 - 양 기관(검찰, 공정위) 상호 업무 사유로 공정거래 협의회 개최 지연
	협업노력도	우수	· 합수부(단)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가 'One-Team'으로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합동수사 진행하는 등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으로 윈스트라이크 아웃 실현하여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 · 성과지표의 체계 우수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금융위, 금감원과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필요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유튜브, 정책주간지 등 활용하여 32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3)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 차단 철저

- '23. 2.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검찰,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전문인력 84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마약류 공급사범 단속 강화 및 합동수사 전개
- '23. 4.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 전담인력 974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25. 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5차 회의 개최하여 공동 대응방안 논의
- '24. 2.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사범, 과다처방 의료인 등 단속 강화
 - ※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24. 2.~'25. 12. 총 62명 인지, 16명 직구속
- '24. 12. 대검과 관세청 간 정보공유 시스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 (PRO-APIS) 구축, 공유정보로 검사 강화
 - ※ '24. 12.~'25. 12.까지 34회에 걸쳐 마약류 우범자 정보 2,024건 공유, 세관은 이를 활용하여 전수조사 실시 등 검색 강화
- 해외파견 수사관 4명을 통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주요 마약류 발송 현지에서의 발송책 검거·송환 등 공조수사
- '25. 9.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강화
- '25. 11. 조직화된 마약류 범죄 대응 위해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 등 전담인력 86명 규모로 「마약범죄 정부합동 수사본부」 출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등 일상 회복 지원

-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하는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재범 방지 및 실질적인 수요 감소 추진

※ '25.(1.~11.) 총 162명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우수사례	마약범죄 주요 수사사례
<p>○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주요 마약류 판매상 10명 적발, 7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등 처분 ☞ 청소년 상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 - 불법 마약류 투약 청소년들은 중독 정도 및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청소년들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p>○ 외국인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 외국인 조직 엄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정부적 대응체계 검토 필요

- 수사·단속·정보역량, 치료·재활·홍보·예방 등 행정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하여 합동수사체계 마련 하였으나, 합동수사본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대응에 적합한 ‘마약청’ 등 독립 단속기구 논의 필요

○ 홍보·예방 활동 강화 필요

- 대중교통 내 스크린 등 매체를 통해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하며, 난이도·중요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측정산식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14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추진, 2개 지연(완료), 1개 부진 - ‘마약전담 수사관 워크숍 개최’ 계획이 국내 여건 변화 및 일정 조율 등의 사유로 지연
	협업노력도	보통	·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집중 단속한 결과, '25. 11. 기준 전년 동기(21,344명) 대비 마약류사범 검거 약 1.8% 증가(21,722명)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다소미흡 100%	· 최근 실적치 평균 이하로 소극적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강력한 합동수사 등을 통한 국내 마약류 공급 감소,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등을 통한 실질적 수요 감소 등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을 통해 마약류 범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 ※ 대검-관세청 간담회('25. 5. 16.)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15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 제10기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선정 요청('25. 8.), 양형기준 설정 상세 의견서 제출('25. 9.) 및 중대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제출('25. 11.)

※ '25. 6. 언론보도(법무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중대재해산업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 언론보도(검찰, 중대재해 신속·엄정 처리방침… “불법과건 산재 구속 수사”, 뉴시스 등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범) 전년 대비 기소 인원 66명(68.8%) 증가('24. 96명 → '25. 162명)

○ 중요노동사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엄단 및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상·하반기 2차례('25. 1. 및 9.) 일선청에 임금체불사범에 대한 엄정 처리 지시

※ (근로기준법위반사범) 전년 대비 구속 인원 2명(22.2%) 증가('24. 9명 → '25. 11명)

우수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설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8.경 제10기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선정 요청 - '25. 9.경 양형기준 설정 상세 의견서 제출 - '25. 11.경 중대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제출 ☞ 양형위원회, '25. 12.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및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25. 12.경 노동계, 경영계 의견 반영한 종합의견서 제출 - '26. 1.경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 	<p style="text-align: center;">[단독]법무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p> <p style="font-size: small;">동아일보 양형기준 2025-08-11 16:08 ></p> <hr/> <p style="font-size: x-small;">후대통령 선거 사고 고강도 대응 주원에 대법원 양형위 예정 없던 안건 추진논의</p>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평가지표 중 「정책환류 성과, 홍보노력도」 분야에서 총점 대비 5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함
 - (정책환류 성과) 관리과제 변경('24.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25.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및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에 따른 낮은 점수 획득
 - (홍보 노력도) 일률적인 평가지표(보도자료 배포 건수) 가중치 부여에 따른 낮은 점수 획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환류 성과) 매년 연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정책 성과 창출
 - 관리과제 발굴 당시 금년도 선거 미이행에 따른 관리과제 변경 및 이에 따른 전년도 과제의 미흡 원인 분석과 실질적 개선 여부 판단 어려움
- (홍보 노력도) 주요 공영방송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증대 등 홍보 노력 지속
 - 보도자료 배포 횟수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및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 설정을 위한 노력도라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하였으나, 대법원의 반영 여부 과정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등 측정산식의 체계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7개 추진계획 중 7개 모두 정상 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주요 노동사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절차를 강화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된 과제로, 목표치 설정 적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정책환류 성과	- 다소미흡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의 체계성 다소 미흡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상세 의견서 및 양형기준(안) 작성에 대검 의견 적극 반영 ·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일선청별로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경찰청) 간 수사협의회 등 개최 활발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언론보도 4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외도피사범 송환 실적 향상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을 추진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상대국 실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년 대비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대상국가* 증가 및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인원** 크게 증가

* '24. 12. 기준 14개국 → '25. 10. 기준 18개국

** '24. 11.(162명) → '25. 11.(252명) (동기 대비 55.6% 증가)

우수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p>○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위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 <p>☞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전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p>	

○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범 공조망 확충

- ◦ 한·마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회의 참석('25. 2.) , ◦ 법무부·유럽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25. 4.),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SEAJust)('25. 6.)」,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회의(PC-OC) ('25. 5., 11.)」 등 국제회의 다수 참석

○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 유엔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작업반 회의,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WG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당사국총회, ASEAN 초국가범죄에 관한 간부급 회의(SOMTC) 및 장관급 회의(AMMTC) 등 국제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및 현안 사건 논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실적은 업무 특성상 외교관계, 상대국 중앙기관의 업무능력 및 여건, 국제정세 등 다양한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고, 지역 네트워크 가입,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각종 네트워크 구축 등도 평가를 위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아 국제형사협력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마중일 및 인접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신속한 해외 소재 증거 수집 및 범죄인 송환 지속 추진
 - 동남아시아 등 인접 국가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하여 수사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송환 추진
-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한국요청과 외국요청 사건의 난이도를 부여하는 등 측정산식 개선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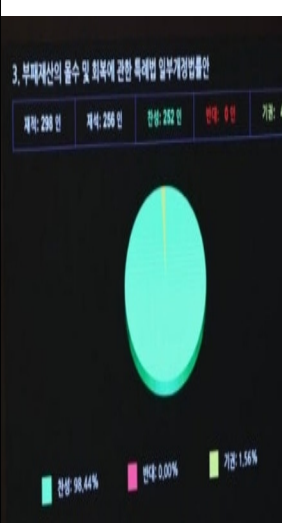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다소미흡	·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 필요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국제형사 공조실적’ 등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난이도·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7개 추진계획 중 6개 정상추진, 1개 지연 -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 지연
	협업노력도	보통	· 외교부, 재외공관, 외국 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81.74%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상대국 내부사정에 따른 실적 감소 등으로 목표치 미달성
	정책효과	보통	· '25. 11.까지 작년 동기 대비('24년 162명) 43.8% 증가한 총 233명의 국외도피사범 송환
	정책환류 성과	다소미흡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조치계획 및 실적 다소 미흡 · 성과지표 체계성 평이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다소미흡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하였으나, 정책 반영 다소 미흡
	홍보노력도	보통	· 정책 효과 전파를 위한 방송, 언론보도 13회 이상 홍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서민다중피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여 보이스포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가능 대상 범죄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노력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정 규정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 보이스포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p> <p>- 「부채재산몰수법」 개정안은 ▲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p> <p>☞ 기존 보이스포싱 범죄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p>	

-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충 지속 추진

○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해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5급 1명)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 범죄수익환수 관련 교육 등 실시

-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수사관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교육 실시 및 범죄수익환수 관련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범죄수익환수 역량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과제는 하반기 국정 과제에 맞춰 '25. 하반기에 수정·변경된 과제로서, 홍보 등 실적에 필요한 기간이 다소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 법률 개정 지속 추진

- '26년 상반기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개선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제 발굴·확대

○ 홍보 노력도 개선

- 홍보 실적을 창출하고,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다소미흡	·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다소 미흡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실적은 국내 정치 등 상황에 따라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난이도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8개 추진계획 중 7개 정상추진, 1개 부진 -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 회원국 간 의견 조율 지연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법률 개정 및 직제 신설(증원) 등 위해 국회, 행안부 등과 협업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된 과제로, 목표치 설정 적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관련 법률 일부 개정 완료 및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 체계성 평이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다소미흡	· 국회 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하였으나, 정책 반영 다소 미흡
	홍보노력도	보통	· 정책 효과 전파를 위한 방송언론보도 11회 이상 홍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3)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공포·시행('25. 3.)
-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공포·시행('25. 4.)
-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지정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5. 6.)
-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시행('25. 9.)
- 「특정경제범죄법」과의 법정형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공포·시행('25. 12.)
- 법원 보관 중인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25. 12.)
-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공포('25. 12.)

○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공포·시행

☞ 단기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성 ‘협박전화’ 등이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는 환경 조성

■ 개정 후 사건 처리현황(~10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죄명	사건 접수 (신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공중협박	101	73	4	7	14	18	30
공공장소 흉기소지	442	357	36	75	126	70	50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회 내 여야 대립으로 인해 형사관계 법령 논의가 원활하지 못함
-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법령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 설명 노력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의적절한 형사사법관계 법령의 입법화 추진
- 홍보 및 정책자료 제공 활성화
- 성과지표 가중치 재설정
 - 형사법령 제도개선의 핵심 전략과 실제 접수 산정 방식 간 정합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지표가 계획의 우선순위와 제도 개선의 실질적 진전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내용을 포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갖추었으나 측정산식의 체계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11개 추진계획 중 9개 정상추진, 2개 지연 - 「소년법」 개정 논의 지연
	협업노력도	미흡	· 법령 제·개정의 경우 다른 기관·부처와의 협업의 어려움 등 협업 체계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과제의 특성상 법령 개정에 따라 즉시적인 정책효과가 도출되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공청회, 세미나, 청원 등의 국민의견 적극 수렴
	홍보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12회 홍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3)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범위험요인 관련 다양한 감독기법을 활용,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

※ 특정범죄 재범률 : '23. 1.09% → '24. 1.00% → '25. 11. 0.86%

- 재범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위한 1:1 전자감독 확대 및 인력증원 추진, 현장 중심 지도·감독 등 **1:1 관리체계 강화**

※ '25년 행정안전부 수시직제 심사 결과 1:1 전자감독 61명 인력증원

- 심리치료 초기면담 워크북 제작('25. 3.), 범죄유형별 사례집 발간('25. 8.),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문가 배치 확대 등 **심리치료 강화**

※ 25개 보호관찰소에 심리치료 전문가 29명 배치('23. 7. 12명 → '25. 7. 29명)

- **정신질환 대상자** 초기 개입 강화 및 원활한 행정입원을 위한 전문 치료병원 발굴·연계 확대('25. 5.), 정신질환 치료 준수사항 적극 신청

※ '25. 10.까지 총 28개 보호관찰소에서 61개 병원 연계

- **배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준수사항 추가 신청, 주택 밀집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정보 발생하여 적극 개입('25. 7.)

- 채팅앱,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분석 실시**, 범죄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준수사항 적극 신청

※ 원활한 디지털분석 준수사항 점검을 위해 디지털 분석관 1명 추가 양성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피해사례 0건

- 경찰청과 상시 업무협의를 통한 집행체계 개선 범무부·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정기적 실시, 잠정조치 시스템 연계 추진*

* 경찰이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6.4억 예산확보)

-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요청('25. 8.)

* 협의회 참석 이후 월평균 접수 건수 약 5배 증가(1~7월 11건 → 56건)

-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현장 실무직원들 의견을 수렴, 사례 중심의 범무부·경찰청 공동업무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

○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개선 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추진

- 가해자 접근 시 접근 거리 만을 알 수 있는 한계를 개선, 피해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 가해자 위치제공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 2.)
- 피해자 보호시스템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후 결과를 반영, 법무부가 시행 중인 지원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기능 개선

○ 강화형 장치 보급 확대 및 기존 장치 성능 강화로 훼손을 방지하고, 지자체 CCTV 연계 지속 추진, 전자감독 수사팀 역량 강화

- ‘강화형 전자장치’ 추가 제작, 기존 장치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2025년형 장치 제작
- 위치추적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CCTV 연계(총 14개 지자체) 및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간 연계 지속 추진
- 훼손 사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체포술, 수사 직무교육 등 수사검거역량 강화

우수사례	다양한 지도·감독기법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국민 불안 가중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지도·감독 대책 필요 ○ 전자감독 심리치료,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범죄 위험요인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 및 전문가 확대 배치, 전문 치료병원 지정 확대, 배달업 종사제한 및 범죄수법별 대응 ☞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재범률을 제도 도입 전 대비 최근 1년 1/25 수준으로 감소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성폭력 동종 재범률</td> <td>제도 도입 전</td> <td>최근 1년</td> </tr> <tr> <td>14.1% (5년 평균)</td> <td>0.57% (1/25로 감소)</td> </tr> </table>	성폭력 동종 재범률	제도 도입 전	최근 1년	14.1% (5년 평균)	0.57% (1/25로 감소)
성폭력 동종 재범률	제도 도입 전		최근 1년			
	14.1% (5년 평균)	0.57% (1/25로 감소)				
<p>전자감독 운영 성과</p> <p>서울신문</p> <p>전자범죄 효과로 성폭력 재범률 감소. 대상자 눈에 인력은 여전히 부족</p> <p><small>입력 2025.04.08 19:51 수정 2025.04.08 19:57</small></p> <p><small>중앙일보의 취재는 1일 4종, 7개 등 4종이 24시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019년 4월부터 19개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률 1% 이하는 전자감독대상자에게 대해서는 발령기간 1회만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특별사형선고판결로 수감된 1444여명 중 1명 등을 포함한 나머지 2023년 전자범죄 단계를 혁신해 감기 않은 단계로 바뀌는 등도 대폭 강화된다.</small></p> <p>언론보도</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1 전자감독 확대 필요
 - 1:1 전담 대상자 지정 요건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정 대상 확대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앱’ 기능 지속 개선
 -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가해자 접근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언론국민 의견 반영,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건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시행한 각종 정책이 결과로 나타난 특정범죄 재범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 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병원 연계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 1인당 관리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전자감독 제도를 통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국민체감 성과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수상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피해자 보호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시 위치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할 경우 실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5. 12. 2) ※ 일반 국민, 보호관찰소, 경찰 등 유관기관 등 총 30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법무부TV, 법무부 블로그 기사단,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25회 제도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 심리치료, 합동 모의훈련, 스토킹 범죄 대응협의회 등 5회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1)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 (국정 74-2)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전략목표 반영도	해당	· 전략목표 I 관련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9.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자체평가위원 대상 전자감독제도 업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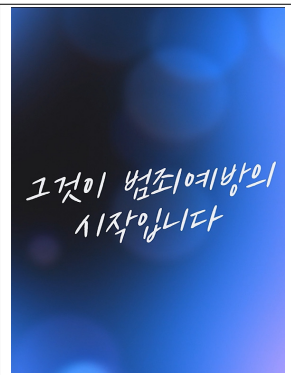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죄예방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을 시각화하여 홍보
 - 마약 확산 방지, 청소년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 주요 현안 관련 영상(숏폼영상 80개) 제작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영상 제작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범죄예방정책국 업무 이해도 향상 도모
 - ※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숏츠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제작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영상제작
 - 한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사회 주요 현안 및 범죄예방 관련 영상(29편)을 다국어*로 제작
 - *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 대학생 등 청년과 함께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 대학생 161명, 35개 팀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가 대학가 및 청년세대가 많이 모이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 범죄예방 관련 캠페인 활동 전개
 - 마약, 성범죄, 딥페이크, 학대 예방 등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온라인 포스팅, 카드뉴스 제작·홍보, 영상 및 웹툰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활동(누적 2,012건) 진행
-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범죄예방정책 홍보
 - 전국에 근무하는 보호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야구경기 관람(4. 29. 대전, 6. 17. 부산, 7. 2. 광주)을 통해 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도모
 - 전광판에 범죄예방정책국의 체육행사를 자연스럽게 노출, 국민의 관심 유도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하여 홍보

○ **범죄예방정책국 소식지(웹진)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

- ‘집중취재’,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 4개의 목차로 구성된 주요정책 소식지를 웹진으로 발간(2회)하여 대국민 정책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범죄예방정책국 직원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도모
- 주요 추진 정책, 범죄예방정책국 소식, 언론 기고 등을 보도자료 (총 30건)로 배포하여 정책의 취지와 추진 내용을 국민께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우수사례	국정과제 홍보를 통한 범죄예방정책 확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소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통해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의 확산 및 정착 도모 ○ 소관부서에서 타이포그래픽*과 국정과제 담당자 브리핑으로 구성된 쇼츠 영상을 제작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가독성을 높인 글자 배치를 통해 전달력을 향상시킨 기법 ☞ 법률적 용어가 생소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 국정과제의 확산과 정부 정책 홍보 효과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전국 지자체에 답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등 협업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다소미흡 100%	· 최근 실적치 평균 이하로 소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온·오프라인 정책홍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요구사항 선제적 반영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다소미흡	·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하여, 정책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및 국민 요청사항(사회초년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 대한 대응하였으나, 실적 다소 미흡
	홍보노력도	우수	·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30회 이상의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9., 안양소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소년 기소유예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딥페이크예방 전문 프로그램」 개발
- 비행예방교육 담당 직원 및 외부강사 대상 사내강사 양성 교육,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개발 프로그램 보급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효과성 분석 법무부 정책연구 추진

○ 소년범죄 추이를 반영한 비행예방교육 확대

- 학교폭력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 확대
- 청소년 사이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온라인 도박 등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검찰·법원 등 의뢰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를 지정·운영

※ 2025. 10. 기준 딥페이크예방교육 5,936명, 도박예방교육 3,894명

○ 비행진단 기능 강화 및 사후 개입 기반 마련

-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정신진단검사 도입 및 관련 예산 편성, 상담·치료 등 지속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기관 사후연계 도입

※ 2025. 10. 초기비행 청소년 심리검사 7,478건 실시

- 법원 의뢰 상담조사서 내용 평가 및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전문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해,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 전문성 강화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 부서, 기관 등 협업 강화 및 성과 홍보**

-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산출하고, 정책수요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2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청소년 초기 비행예방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정책수요자, 이해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등 15회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1)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여성 보호·위탁소년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성적 과밀수용 상황(연중 최대 수용률 : 2022년120% → 2023년135% → 2024년155%)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 여위탁 전담 시설 마련,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소년원 신축 등 시설확충을 추진
 - ※ 2025.9.30. 기준, 전국 소년원 수용률 123% → 여성소년원 183%, 서울소년원 분류심사원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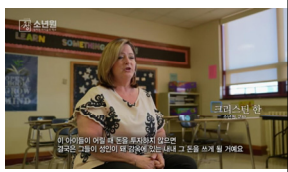

○ 소년원 학생 대상 차별화된 맞춤형 처우를 통한 치료·관리 강화

- (소년원 입원시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전수 진단) 모든 학생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SCL-95) 실시,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일반군·관심군·치료군 등 그룹별 분류로 2차 개입 대상자 분류
- (그룹별 맞춤형 처우) 각 그룹별로 필요한 전문가 매칭, 개인상담 및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그룹별 차별화된 처우 실시
 - ☞ 소년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담임 협업 확대를 위해, 「소년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담임 면담 및 개입 매뉴얼」 개발(2025. 8.)
 - ※ 「아가페재단」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정신질환 전문인력 유치, 발달장애·정신질환 소년원학생을 위한 특수반 운영
- (원격진료제도 도입) 2026년 상반기부터 정신과 약 복용 학생 비율이 높은 2개 소년원(대전·안양) 시범 운영 예정 → 2027년 전국 기관 확대 시행

○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과정 개편

- 입원 초기 직업흥미검사 및 진로상담 실시를 통해 직업적성 확인, 능력·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 소년원 신축 등 시설확충을 추진함
 - ※ 전국 보호소년 대상 직업흥미검사 1,236건 실시(2025. 11. 기준)
- 뷰티메디컬, 코딩 등 학생 선호도 및 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배우고 싶고 도움이 되는' 학생 중심 직업훈련 과정으로 개편
 - ※ 총 40종 61개 과정 운영(장기직업훈련 12종, 단기직업훈련 9종, 직업체험교육 19종)

- 기초학력 증진과정 운영 및 교육부 교사 파견 등 교과교육 강화
 - 일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과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 2025년부터 소년원에 교육청 소속 교사 파견 지원
 - ※ 3개 기관(서울·전주·안양소년원) 총 5명 교사 파견(체육 3, 과학 2)
 -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학습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도모, 출원 후 진학 등 안정적 사회적응 도모
 - ※ (입원 시) 기초학력 진단→(재원 중) 기초학력 미달자 대상 보정학습 지도→(출원 전) 향상도 진단

우수사례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 파견 등 교육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향상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부와 협의 → 교육부 파견교사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종류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제3호 - 파견 기간 : '25. 3. 1. ~ '26. 2. 28.(1년) ☞ (소년원학생) 교육받을 권리 보호와 실질적 학습권 보장 ☞ (소년원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과정의 신뢰도 제고 ○ 부족한 소년원 교수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 중 	 <p>해의 시려(美 아델포이 소년원)</p>  <p>살내 체육 수업</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년원 정신질환자의 증가* 및 다수의 정신과 의무관 결원** 지속 상황에서 외부 의사의 왕진 또는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의료적 처우를 수행하고 있음
 - * 정신질환자: 2022년 말 369명(37%) → 2023년 말 395명(44.6%) → 2024년 말 478명(50%) → 2025년 11월 519명(47.7%)
 - ** 정원 12명 중 정원 1.5명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정신과 전문의 3명 근무 중
 -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제도 도입 필요
 -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근거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가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2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 추진
	협업노력도	우수	· 소년원생 교육 및 문화·예술 지원, 의료재활 처우향상을 위한 부처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소년원에서 자격증 취득, 초·중등학교 학업 연계 교육 등 교육 실시로 출원 후 학업연장취업 등 사회정착의 기본 토대 마련에 기여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특수단기 교육(8호) 프로그램 개선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8호 프로그램 워크북 개정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KBS(시사기획 창 방치된 아이들의 학교) 등 26건 홍보 적극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1)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9., 안양소년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충

- 퇴직 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등 채용 방식 다양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등 의사 6명 채용

※ 정신과 의사 총원을 전년 대비 20.7%p 증가(45.3% → 66%)

-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전공의 '26년 정원 2명 확보

※ '26년 1년차 전공의(정신건강의학과) 2명 배정, 공중보건의 2명 근무 중

○ 의료인력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

- 우수 의사 인력 유치를 위해 민간 수준의 연봉책정이 가능하도록 의사 7명에 대한 보수 인상(기준급 대비 200~350%)

※ 법무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분기별 연봉 인상 추진

- 정신의학 최신 정보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치료·재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2명 국제학회 참가

※ '25. 9. 24.~29. 일본 도쿄, PRCP & WACP Joint Congress 2025 Tokyo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ISP(정보화 전략 계획) 실시

-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시스템 개편 전략 수립

※ '25. 4. '목표모델 설계 완료 / '25. 5. 최종 보고 및 사업 완료

- '26. ~ '27. 2년간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로봇기반 인지재활치료실 설치 및 시범운영


- 고령층 및 경도인지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로봇기반(실봇 : SILBOT) 인지재활치료실 설치·운영

※ '25. 11. 인지재활치료실 시공 및 로봇 설치 완료 / '25. 12. 시범운영

- 치료·재활 특화 로봇을 이용한 두뇌 훈련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피치료감호자 정신건강 증진

○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 발달장애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 전문병동 운영
 - ※ '25. 12. 31. 기준 환자 30명 감각통합치료 및 행동치료 중
- 피치료감호자 작업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정신재활치료 실시
 - ※ '25년 심리극, 일상생활훈련 등 정신재활치료 6,052명(연인원) 실시
- 피치료감호자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 '25년 PC정비,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227명 수료, 70명 자격증 취득
- 증상별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특수의료장비(MRI·CT) 운용
 - ※ '25년 촬영 건수(누적) : MRI 2,310건, CT 1,826건
- 심신안정 및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심신안정실, 원예치료 시설 등 운영

우수사례	AI 기반 발달장애인 맞춤형 치료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이상·공격행동을 자동 감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먹질, 머리 때리기, 발차기, 밀고당기기, 배회하기, 달리기, 점프, 쓰러짐, 드러눕기 ○ '25. 11. 시스템 구축 및 직원 교육 / '25. 12. 시스템 본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공격행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통해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 증진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center;">모니터링 예시</p>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치료감호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및 홍보 부족**

-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확충,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 AI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 등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 하였으나,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및 홍보가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효과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AI 기술 도입 확대, 여성 정신감정 재시행 등 치료환경 개선 성과, 피치료감호자 재범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의료인력 부족 등 외부 환경 분석을 토대로, AI 도입 및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0개 추진계획 중 10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6년도 1년차 전공의 정원 확보(2명), KT&G와 협업하여 인지재활치료실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정신과 의사 등 인력 확충, AI 기술 도입 등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관련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체감효과 다소 미흡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분기 1회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의무직 연봉 인상(의사 7명, 200~350%) 및 보건복지부 업무 협의를 통한 전공의 확보('26년 1년차 전공의 2명) 등 현장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홍보 5건 실시, 치료감호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입체적 소통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마약류사범 단속과 치료·재활 병행을 통한 재범 방지 추진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1% 수준으로 관리
 - ※ 2020년~2024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5년 평균 3.4%에 비해 약 0.3%↓
-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강화 및 전문가 연계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 불시 약물검사 : (2024. 11.) 29,352건 → (2025. 11.) 30,368건(전년 동기 대비 3.5%↑)
- 마약 검사 다양화 및 신종 마약 대응을 위한 ‘간이시약기’ 전국 확대 시행 및 현장 적용 안정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속성 강화를 위한 「마약류사범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내실화
- 보호관찰소 중심의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 재활 협업체계」 구축
- 보호관찰 현장 중심의 중독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즉각적·전문적 치료 개입체계 구축
 - ※ 2025년 보호직 42명 중독심리사 자격과정 수련 중(누적 81명)

○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위험군 관리·감독 강화
- 복약검사 간이시약기를 통한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검사 활성화
-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보호관찰소 내 ‘약물분석실’ 신설
- 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 등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치료비 지원 내실화 및 치료 지속률 제고
-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 활성화
- KRX국민행복재단과 협업, 정신건강 조기 개입 및 치료지원을 통한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추진
- 정신질환 대상자 보호관찰 종료 시 경찰·지자체 통보체계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 사후관리 강화

-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추진**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이 깊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감독 실시**
 - 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전원 심리검사(SCL95 등) 및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상담 실시
 - 외출제한명령 집행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가족의 수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인 ‘스마트워치형’ 감독방식 확대 추진
 - 심리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대면상담 등 고위험 소년 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배경)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증대 ○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군 선별 및 분류)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를 통해 범죄 위험군 체계적 선별 - (보호관찰 지도감독)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대면지도 강화, 복약검사 및 치료 내역 확인, 심리상담·병원 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고위험군 사후관리)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 										
<p>《경찰의 고위험군 정보 활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현행) 112시스템 연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추가)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연계</td>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의 정신질환자 및 특정가석방(살인, 강도 등) 종료자 거주 정보 참고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동기 고위험군 정보를 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분석에 활용 → 기동순찰대의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강화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td> </tr> </table>		(현행) 112시스템 연계	+	(추가)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의 정신질환자 및 특정가석방(살인, 강도 등) 종료자 거주 정보 참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동기 고위험군 정보를 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분석에 활용 → 기동순찰대의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현행) 112시스템 연계	+	(추가)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의 정신질환자 및 특정가석방(살인, 강도 등) 종료자 거주 정보 참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동기 고위험군 정보를 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분석에 활용 → 기동순찰대의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p>☞ 위험성 평가 기반 치등관리 및 고위험군 집중 지도·감독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부처 차원(법무부·경찰청)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역량 강화</p>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상자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전문프로그램 확대 및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교육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 등 고위험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난이도 설정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 추진
	협업노력도	우수	· 마약류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 재범률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수치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도전적 목표치 제시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치료적 개입 병행을 통한 재범 억제율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 발생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다소미흡	·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선기관의 마약사범 지도·감독 효율성 제고 및 간이시약 관리 체계 강화에 반영하였으나, 정책 반영 다소 미흡
	홍보노력도	우수	· 마약류 사범 단속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실시 등 언론사를 통해 22회 적극적인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전략목표 반영도	해당	· 전략목표 I 관련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9., 서울동부보호관찰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 2023. 7.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생활관 4곳(경기·충남·울산·전남동부지부)을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생활관 운영
- 출소자 재범억제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전자감독 대상자를 재범고위험군으로 지정, 전국 26개 생활관에서 집중 관리 실시
- 숙식제공·심리상담·취업지원 전담 직원을 중심으로 집중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공단 보호사업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우수사례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집중사례관리팀 구성 및 직무교육 실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집중사례관리팀 구성(202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공단 생활관에 <u>취업상담·심리상담·생활지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u> 구성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집중사례관리팀 직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직무교육 실시 ☞ 수감생활로 사회적이성이 어려운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에게 맞춤형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재범하지 않고 사회정착하도록 지원 |  |
|--|--|

○ 가정폭력 행위자 감호위탁 시설 운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정(2023. 5. 10.)에 따른 공단 16개 지부 감호위탁 시설 운영

○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 KT&G 및 지자체 지원금,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활용하여 법무보호대상자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 미성년자녀 공부방 만들기, 기후위기 재난피해 지원 및 예방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

- **법무보호대상자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결연활동**
 -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방문 및 위문품 전달 등 경제적 지원
 - **무의탁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사업 내실화 추진**
 - 공단 생활관에 입소한 대상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각종 기초생활 시설 제공을 위하여 리모델링(다인실 → 1인실) 사업 지속 추진 중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추진**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출소자 등 취업지원) 추진계획 인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8,500명으로 사업 추진
 - ※ (계획인원) 2023년 8,000명 → 2024년 8,500명 → 2025년 8,500명
 -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발맞춰 소년범 대상 취업지원사업 확대 운영(소년원 250명 → 300명 확대 추진)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 및 출소자 일자리 기반 확대**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9개 업체 선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기업 우대혜택 확대 필요**
 - 장애인 등 타 취업취약계층과 비교,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등에 따른 우대조치 제도 미흡
 -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필요**
 -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공단 생활관 시설 확충 및 집중사례 관리팀 체계적 운영 노력 필요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난이도 설정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KT&G와 주거지원사업 협업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법무보호대상자 만족도 향상과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효과 창출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해피콜 지원사업 설문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내부 문서 안정성 확보 수렴을 통한 설문 문항 개선 등 정책 반영 우수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17회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1)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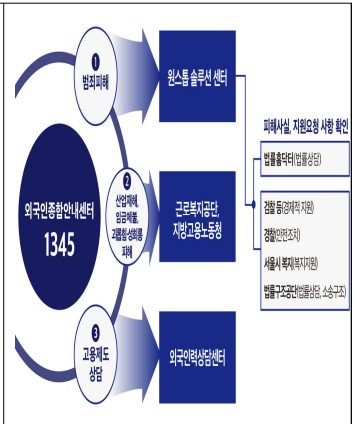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마련('25. 8. 29.,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7. 24.) 및 개선방안 마련
 - ※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여 거상('25. 2.)
 - 계절근로자 폭염폭우 행동요령 및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배포(9. 30.)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9. 2. ~)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피해구제 정보제공 안내(9. 19. ~) 및 인권보호·산업안전 교육 강화('25. 9. ~),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11. 6. ~),
-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참여
 - 심의 대비 NGO·인권위 보고서 분석을 통해 약 450개 예상질의 준비 및 이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입장 및 답변 취합
 - '25. 4. 29.~30. 8년 만에 개최된 심의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일간 진행, 총 8개 관계부처·기관 23명 중 우리부는 5명 참석
-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작성
 - 인권위, 시민사회, 학계 등 의견 청취를 위해 홈페이지에 사전 의견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조회 후 제출
- 유엔 서한 질의 및 개인진정 답변,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문조사 대응, 국제인권기구와의 면담 등
 - ※ (국내 총괄) 유엔 인권협약 개인진정 답변서 4건, 특별절차 서한 등 국제 인권규범 관련 답변서 4건 작성·제출
 - (부내 총괄) 미 국무부 인권 및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10. 17. 국제사형제 반대위원회 위원 면담

우수사례1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마련

- (인권보장 강화)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제도 접근성 강화 및 인권침해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 지원까지 연계되는 지원 체계 구축
- (인권보호 정보제공) 외국인 대상 3단계(비자발급→외국인 등록→체류연장)에 걸쳐 인권침해 예방 등 정보제공 강화, 외국인 초청 시 고용주의 인권 보호 참여 유도
- (계절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전문기관 도입을 통한 MOU 체결·선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브로커 개입 차단, 계절근로자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강화



우수사례2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9. 8.)

- (배경)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20. 5.) 근거, 기업의 인권실사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각국의 법제·정책 등 국제적 규제 흐름을 살피고,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청취하여 국내에서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 마련 독려
- (효과) 유엔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부, 기업, 학계 및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경영과 관련한 규제와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한 아시아 최초 정부-국가인권기구 주최 행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제인권 추진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 국민체감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국제사회의 격동적인 상황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4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관계부처 등과 워크숍, 토론회, 협조회의 등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외 인권 업무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 방안 마련 및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숍과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하는 등 인권가치를 실현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개인진정 견해 관련 비공식 간담회, 외국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국제인권협약 관련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 마련하는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14회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해당		· 전략목표 II 관련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

- 정기 실태조사: 교정시설, 소년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검찰청 구치감 등 35개 기관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 개선조치 170건, 설문조사 2954명, 직접면담 623명 실시 / '25. 12. 말경 4개 우수기관 선정하여 포상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 마련(개선조치 12건)

※ 직원 22명 면담, 직접면담 66명, 설문조사 318명 실시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사건 4,570건 접수,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3,000건 실시
-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면전진정 사건에 신속·적극 대처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

※ 전국 구금·보호시설 중 73개소 화상조사시스템 설치 운용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 각 직렬별(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업무 현장과 밀접한 인권감수성훈련 과정 운용


※ 인권감수성훈련 18회 437명(검찰 3회 64명, 교정 8회 203명, 보호 4회 98명, 출입국 3회 72명) 실시

- 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건 예방을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교육 지속 추진

※ 1:1 맞춤형 교육 13회 136명(검사 2회 12명, 검찰수사관 11회 124명) 실시

- 인권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외부 전문가 초빙 전문교육 실시, 내부강사 워크숍 정례화 등 인권교육 역량 강화 추진

※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 총 5회 79명

<p>우수사례</p>	<p>외교부-법무부-기업 합동 조사</p>	
<p>○ 미국 조지아 구금 우리 국민 합동 조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체포·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교부-법무부-기업 간 합동 조사 진행 ☞ 수용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 당국의 국제규범 및 자국 내 구금기준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가능성 의견 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안대응 노력 강화

- 최근 교정시설 내 단순·우발적 폭행을 넘어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 폭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2025. 10.부터 시행 중인 「전국 교정기관 폭행사고 실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에 따라 지속적 폭행 피해 전력자, 치매 등 인지능력 장애, 장애인 수용자 등을 ‘폭행 피해 우려자’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상담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폭행 피해 여부를 집중 관찰하는지
- 더불어 상습적인 폭행 가해자, 징벌 전력 등 과거 수용이력 및 현재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폭행가해 우려자’로 지정하고 독거수용 원칙과 혼거수용의 경우 거실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상담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폭행 피해 우려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지 정기적인 점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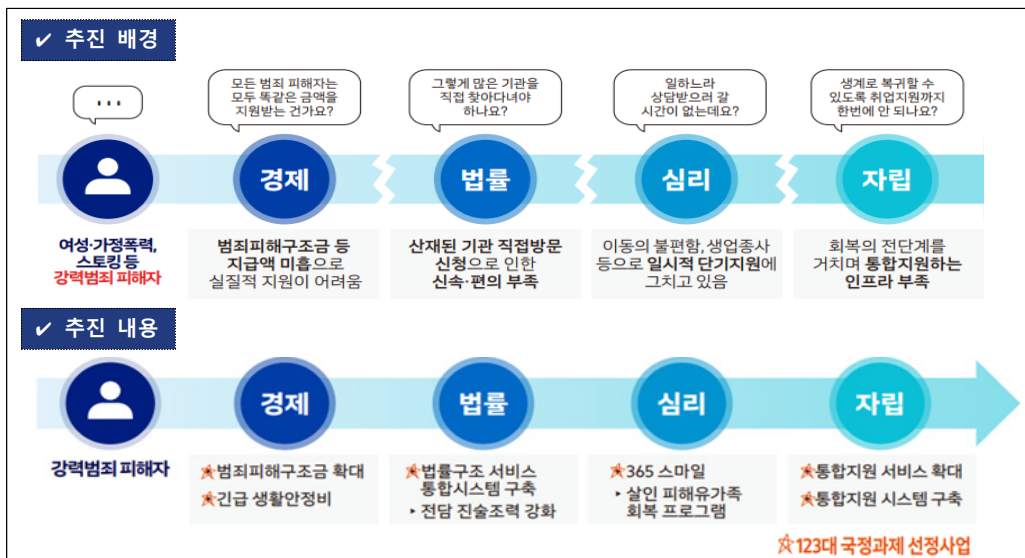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진정사건 단순각하, 이첩 대상 사건 증가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 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2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우수	· 미국 조지아 구금 우리 국민 합동 조사 진행하는 등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국민여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갑자기 발생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양주출입국외국인보호소 등 35개 수용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수용시설로 개선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필요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푸르미 방송, 인권침해 신고용 수취인 부담 무료 봉투 제작 등 홍보를 실시 하였으나, 보다 다각적인 홍보 활동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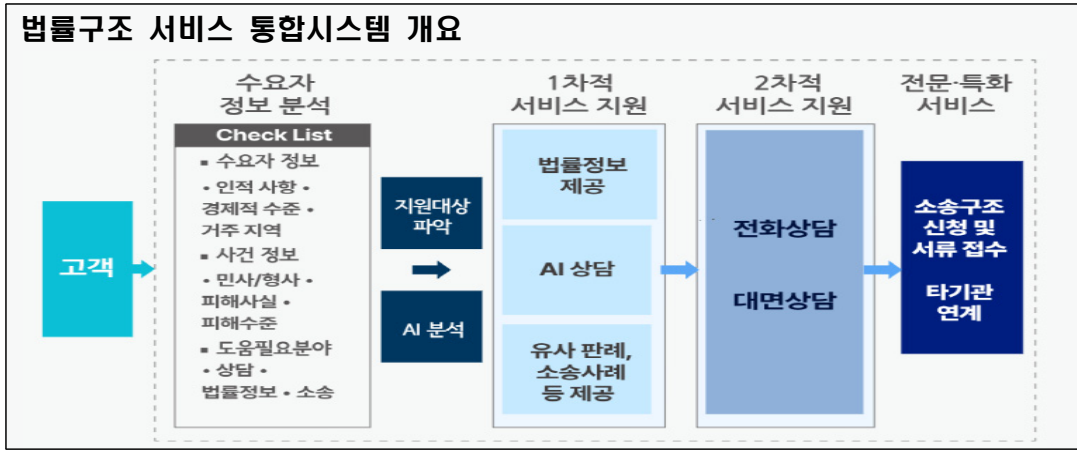
□ 주요성과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회복의 수단**에서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자립** 도모
 -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지원 기관 간 보유정보가 공유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편리하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경제) 구조금 지급 대상을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과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을 피해자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 이상 보장하도록 하며,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비를 신설하는 등 **범죄피해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 회복 지원 강화**
- (심리) 트라우마 치료 전문 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운영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365스마일’, 유가족 기반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법률)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인권주간 지정 등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 그 외 집중 호우 및 대형 산불 피해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등 대형사고·재난 등 위기 시 합동지원단 구성 및 지원 실시

우수사례 **법률홀닥터 사업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홀닥터 사업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개선 기여한 성과 인정
- ☞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우수사례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

-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 주말야간 상담체계 구축,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인정
- ☞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구분	수상 사례	분야
최우수	관악구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법치기 베타 인텔	체육관광과
우수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민원구조과
우수	업무지속 회복 인력 확보 2차, 3차, 4차, 5차	인재개발사업담당관실
우수	소비자물류 최적화용역 도입	이원정보과
우수	전기통신사업자 채납부채 회산 지원인력 인력기반 강화	전자정보과
우수	간이주거 제공을 위한 임대주택 공모사업 추진	부동산과
장려	간이주거 임대료 감면신청을 위한 맞춤형 전담인력 투입	물류정보과
장려	이동통신사 불기밀 방지 시스템 도입	정보보호과

우수사례 **“살인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반영한 소득연동형 구조금 체계를 설계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의 심리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기반 프로그램 최초 도입 등
- ☞ 2025년 법무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구분	사명	기능 분야	공로
최우수	살인피해 유가족 지원	민원정보과	복합 우수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정보과	민원정보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 간담회 지속 실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업·피드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피해자들의 실제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는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4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협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구축 · 적극행정 공모전 '최우수', 정부혁신 경진대회 '우수' · 국민체감 성과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수상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 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법률홈다터,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다양한 매체를 통한 50회 이상의 홍보 실시 ·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수상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4)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국정 74-2)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0., 서울동부스마일센터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사업 지속 추진
 -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 아동학대 처벌법 하위법령을 개정('25. 6. 21.시행)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함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검사·전담수사관 대상 교육을**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문역량을 강화함
 - * 권역별 총 10회 실시, 총 817명 수료('25. 4.~11.)
 - ** 전담검사 26명('25. 4. 14.~16.), 전담수사관 31명('25. 5. 19.~20.)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사범 절차상 지원제도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제도 실태조사, 전담변호사 증원(6명),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함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총 616명 수료('25. 7.~9.)
 - ** '25년도 진술조력인 12명 신규 양성(총 140시간의 신규 양성교육 실시), 기존 진술조력인 대상 보수교육 실시(2회, 총 115명 수료)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평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기본 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함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을 지원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함*
 - * 검찰청, 경찰서, 해바라기센터등 해당 시설 내부 및 기관 민원실에 부착 및 비치하여 홍보



<p>우수사례</p>	<p>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 아동학대처벌법 하위법령 개정('25.6.21.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함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검사의 청구권 확대 및 사건관리회의 정비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검토 필요

-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채택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실적 구분 필요

- 범죄피해자 지원 건수가 단순 상담, 정보 제공, 실질 지원 제공 중 무엇인지 구분하여 성과를 더 잘 나타낼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국민 홍보방안 다각화

-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식(숏폼 및 롱폼 비디오, 출퇴근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지표에 반영되는 실적에 대한 설명 보완

- '범죄피해자 지원 건수' 성과지표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실적의 합으로, 진술조력인의 경우 여러 조력방식 중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 중개보조를 진행한 정식 진술조력 건수만을,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 단순 상담이나 정보제공이 아닌 실제 법률 대리한 건수(지원 완결성이 확보된 건)만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면밀히 관리해왔음
-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법률 및 진술조력을 하는 경우 단순 상담정보 제공실질지원 제공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동 성과지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리과제 내용을 포괄하나, 측정산식의 체계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6개 추진계획 중 16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합동교육 체계 구축, 매년 초 교육과정, 대상 인원,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 주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아동학대처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 지속적 노력 필요 · 약 12년간 동결되었던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을 통해 처우 개선 및 피해자 법률서비스 품질 개선
	정책환류 성과	- 다소미흡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 체계성 다소 미흡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진술조력인 제도개선 TF회의, 피해자국선변호사 실태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유튜브 롱폼 및 숏폼 제작, 제도 설명 리플렛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정책을 15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3)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 (국정 74-2)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27., 서초구 외부 회의실(간담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용 공간 확충을 위해 5개의 교정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용동 증축 공사를 추진, 357명의 신규 수용 정원을 확보함
 - 울산(구), 진주·군산·순천(교), 논산(지소)
 - ※ 목표 355명 대비 0.5% 초과 달성, 과밀 해소 및 인권보호에 기여
- 신축 6개 기관, 이전 및 재건축 7개 기관에 대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 적극 진행
 - [신축] 화성여자(교)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태백·남원(교)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경기북부(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전(구) BTL 사업추진, 광주(구) 부지 재선정 단계
 - ※ BTL 사업 :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 이전
 - [이전] 창원(교) 공사 진행(1.33%), 원주(교) '26년 상반기 준공, 대전교도소 위탁개발사업 추진, 안양(교) 사업계획(안) 기재부 검토, 전주(교)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부산교정시설 단계별 이전추진 (先 부산(교) 이전)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
- 내진보강, 난방시설 개선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내실화

우수사례	법무부-주민대표 상생협의회	
<p>○ 화성여(교) 신축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법무부-주민대표 상생협의회(5회 추진)' 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사업 정상화('26년 착공 예정)</p>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교정시설 확충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평가를 위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아 성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책 효과관련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적을 위한 점수를 세부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일반 국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위하여 언론 설명자료를 적극 배포하거나 지역주민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효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저조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분야의 점수를 보완하겠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정시설 조성 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제고의 노력 필요
 - 지자체·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주민간담회 등 적극적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 현장 방문 및 업무협의 등 업무에 맞추어 각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통계획 등 평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수용공간 확충 및 갈등 해소 노력 실적을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8개 추진계획 중 8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우수	· 국회, 지자체,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다소미흡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평균 이하로 소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 및 수용동 증개축 사업 추진을 통해 과밀 수용 개선하였으나 체감 효과 다소 미흡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 체계성 평이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주민설명회 및 상생협약식 개최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화성여(교) 신축사업 추진에 반영 · 안양(교) 이전 진행, 창원(교) 공사 진행, 화성여자(교) 26년 하반기 착공
	홍보노력도	우수	· 교정시설 신축이전 관련 언론기사 등을 포함하여 15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미흡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미흡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홍보채널 다변화 전략을 통해 대국민 소통 및 지지확보**
 - 주요 언론 매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교정행정 홍보
 - ※ 중앙일보 '6000L 기름창고 터지면 끝장, 그날 교도관은 소방관이 됐다.'('25.4.3.) 등 7건 기획보도
 - 영화·공중파 방송 등 국민에게 친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 매체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영화 <만남의 집> 舊 대구교도소 촬영 제작·지원 및 시사회, TvN<유퀴즈 온 더 블락> 방영
 - 인기연예인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여 △ 교정의 날 행사 진행 △ 교정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교정행정 홍보역량 강화
- **정책자문위원회,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 교정본부 홍보콘텐츠 공모전(주제 : 교정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응원)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정행정 홍보
 - ※ 10. 28. '제80회 교정의 날' 법무부장관상 14명(숏폼 7, 웹툰 7) 시상(총 128팀 응모)
 -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추진(3회 개최)
 - 지역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교류활성화 및 정책홍보(54개 기관 54회 개최)
- **보도설명자료 배포 및 이슈 대응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허위·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배포·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 적극적 언론 대응
 - ※ 보도자료 배포 730건, 설명자료 배포(10건), 언론중재위 1건

- ‘교정공무원 등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지역언론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홍보·예방 활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전국 40여 개 기관에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 발생하였으나 홍보활동 후 대폭 감소

-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 교정정책에 대한 M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을 위해 새로운 소통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개설 및 적극 활용(4. 18.)

우수사례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지지강화를 위한 홍보채널 다변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도관 위촉활동을 통한 국민소통 및 공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기연예인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여 △ 교정의 날 행사 진행 △ 교정홍보 포스터 촬영 △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교정행정 홍보역량 강화 ※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 법무부 명예교도관 위촉 (10. 21.) 및 포스터 제작·배포 ○ 국민에게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정행정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공중파 방송 등 국민에게 친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매체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영화 <만남의 집> 舊 대구교도소 촬영 제작·지원 및 시사회 (장관님 참석) / TvN<유 퀴즈 온 더 블락> 방영 ☞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식을 도입·확장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대외적 위상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NS 구독자 및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인스타그램 개설 이후 정체가 예상되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자 등을 늘릴 수 있는 대·내외적 개선 방법을 적극 발굴 시행 필요
 - 정책 추진사항, 행사, 강좌 등의 우수콘텐츠 전달을 위한 SNS 플랫폼 가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발굴 필요
 - ※ 예시) 교정지, 교정본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등 가용한 자원을 이용한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적절하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대국민 소통 및 지지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부, 엔터테인먼트 기업, 민간 영화 배송사 등과 협업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새로운 홍보방식을 적극 시도하는 등 정책 체감 효과 증진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민원인 만족도 조사,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대체복무요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정정책 수립 시 반영 ※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개최 시 논의 의견을 대체역법 개정 등으로 적극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총 16회에 걸쳐 JTBC,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에 교정관련 정책 홍보 ·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수상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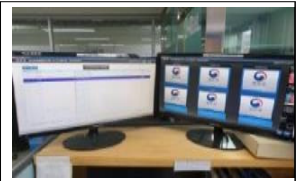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수용자 카드형 변호표 전국 교정기관 확대 운영
 - 전국 출역 중인 수형자에게 수용자 카드형 변호표를 도입하여 수용관리 업무 효과성을 증대하고, 수용자 책임 의식 향상에 기여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운영
 - 수용자가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도입,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우수사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

- 1일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 1개 호실(14회차) 시범 운영 중('25. 10. ~ '26. 4. 6개월)
- ☞ 수용자의 각종 소송서류 작성 등을 위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산 준비 미흡
 -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실시 및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신청 등 준비 미흡으로 인해 일정 지연
- 변호인 스마트 접견 보안성 보완 필요
- 부서 업무 추진의 한계 존재(시설 확보 등)
- 외부전문가와의 소통 및 변호인 스마트접견 홍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산 적기 신청을 통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
 -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교정기관 선정 후 총 24개 호실 증설
- 제도의 보안성 확보 필요
 -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문인증 시스템 도입
- ‘장소변경접견 중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이용인원’ 지표의 산식을 해당 인원들의 이용 건수 등 지표설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변경
- ‘AI 첨단기술을 이용한 체계적 수용관리’는 시설 및 시스템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관리과제명 변경
- 시행계획 수립 전 외부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의 방향성 정립 및 성과 제고
-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실시 등에 대한 적극홍보(법조인, 로스쿨, 교정기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 19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6개 지연, 1개 부진 - 예산 확보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순차적 지연
	협업노력도	보통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도입 및 카드형 번호표 도입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접견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과거 3년간 평균 대비 실적이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미흡 다소미흡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 미이행 · 성과지표 체계성 다소 미흡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일선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 청취 ※ 각종 네트워크 장애, 장소변경접견 심사일자 조정 등의 내용을 실무에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총 2건 홍보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보통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4)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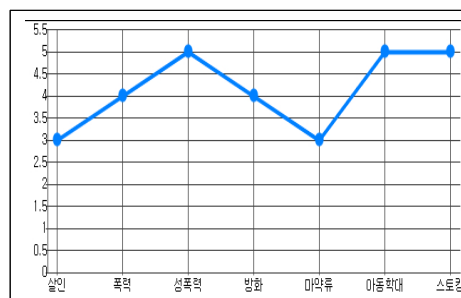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규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도구(K-SACS) 도입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예측성 강화
 - ※ K-SACS(Korea Sex offender Assess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교정처우를 위한 한국판 성범죄자 평가도구
 - 기존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도구(Static-99R, HAGSOR)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가석방예비심사 상정 전 K-SACS 추가(2차) 검사 실시로 실질적인 재범위험성 완화 여부를 판단하여 가석방 심사의 신뢰성 강화
 - ※ Static-99R: 정적위험요인 평가도구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한림 성범죄 위험성 평가도구
- ‘수형자 다면적 평가’ 제도 도입으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처우를 위한 종합적 평가 체계 마련
 - 범죄유형별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출소 전 6개월 이내 KIMAS 재평가를 의무화하여 위험성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의 기반 마련
 - ※ KIMAS(Korean Inmat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System): 한국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 시스템(도구)

우수사례 KIMAS를 활용한 ‘수형자 다면적 평가’ 제도 도입

- 신규 위험성 평가도구(KIMAS) 활용
 - 피해의식, 범죄동기 등 88개 항목으로 수형자의 범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복잡화지능화된 범죄 양상과 수형자 특성 반영
 - 범죄유발요인에 기반하여 과거 범죄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중대 범죄 재범가능성도 예측
- 석방 전 KIMAS 평가 의무화
 - 신입 정밀분류심사 결과 대비 재범위험성 완화 여부 확인
- ☞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집중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관리 강화를 통해 재범률 완화 기대



살인	폭력	성폭력	방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보통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높음	높음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층면접 강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개선의지, 재범위험성, 사회복귀 준비상태 등을 심층면접관이 직접 면담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가석방 심사 내실화
 - ※ (~ '25. 12.) 가석방 심층면접 615명 실시

○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 지속 시행

- 정신질환·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조건부, 출소 후 취업 연계를 통한 취업조건부, 보호수용 조건부 등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형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 기여

※ (~ '25. 12.) 조건부 가석방 136명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협업 노력도 부족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 다자 참여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일정 조정 곤란 등으로 연내 협의회 개최 횟수가 1회에 그침
- 심리검사, 개별상담, 각종 개인정보 포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개별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과 보안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류심사 업무 특성상 외부 기관과의 협의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제한적이므로 협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

○ 홍보 노력도 부족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가석방 업무의 특성상 가석방 확대 등 정책시행 취지와 달리 국민적 반감을 사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보도자료 배포 등 선제적 홍보에 구조적 한계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범고위험군 등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호수용·치료·취업 등 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적극적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찰을 위해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 협업 과제 적극 발굴

○ 분류심사가석방 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방식 다양화

- ‘월간 교정’,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등 정기간행물에 분류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가석방 심사 등 전문 업무에 대한 설명형 기고 추진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릿 배포 및 보라미방송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등 수형자 대상 홍보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재범률 완화 관련 구체적·체계적 계획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와 관련이 깊은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16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2개 지연 -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에 따라 7월에 장소 제공이 가능하여 가석방 업무담당자 교육 일정 조정(완료) - ‘수형자 다면적 평가’ 업무가 '25. 4. 도입되어 △9월 사례회의 개최를 위한 축적된 자료 부족 △인사이드 직후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10월로 일정 조정(완료)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관련 협의회 운영 실적이 연 1회에 그치고 그 외 다른 협업 추진 실적이 없으므로 정책 이행을 제고를 위한 협업 노력 다각화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지방(청) 분류센터 인력 감소, 심사 대상자 확대로 인한 '23년 대비 업무량 증가(23%↑)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보다는 최근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신규 평가도구 도입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실효적인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안착과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 등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사례회의, 영상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분류지표위험성 평가의 매뉴얼을 교정현장에 적합하도록 개정 ·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가석방 정책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카드뉴스 1회 배포 · 국민 정서상 민감한 가석방 업무의 특성상 적극적인 홍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설명형 기고 등 분류심사 가석방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작업장려금 인상 및 지급률 개선**

- 작업장려금이 출소 후 실질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어 재범방지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인상('25. 1. 1.부터 적용)
- 취사장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을 인상하여 고강도 작업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작업기피 현상 완화하였고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 1일 지급단가 인상

구 분	등급	지 급 액		인상액	인상률
		변경전	변경후		
취사장	상	3,700 원	4,500 원	800원	22%
	중	3,200 원	4,000 원	"	25%
	하	2,700 원	3,500 원	"	30%
직업훈련	없음	900원	1,000 원	100원	11%

- 외부기업통근작업 작업장려금 지급률 개선으로 모범수형자의 사회 복귀지원 강화

※ 계약업체 수납액의 80% → 85%(5% 인상)

○ **작업 중심의 희망센터 발굴 및 확대**

-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력 제고 및 경제적 자립 강화를 위한 작업 중심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 운영 및 확대
- 모범수형자의 기업체 취업으로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수형자 사회통합 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이를 통해 수형자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출소 후 해당기업 취업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재범방지

※ ('13.) 밀양희망센터 ('16.) 아산희망센터 ('23.) 평택희망센터 ('25.) 흥천, 사천희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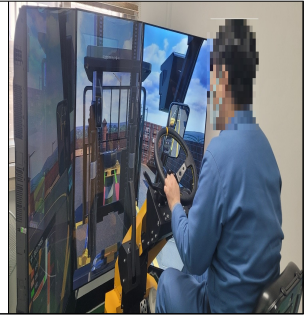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산업변화에 따른 취업 유망직종 훈련 신설 및 고급과정 등을 확대 하여 출소 후 수용자 취업역량 강화

※ 원주(교)등 2개 기관 반도체설비보전 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과정 신설

우수사례 | 첨단 기술장비 도입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 증장비운전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도입
 - 외부출장 방식의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체험형 훈련 및 안전한 훈련과정을 조성하고 반복 훈련을 통한 훈련 효율성 향상
- ☞ 전문 기술 습득 및 효율적인 훈련 시행으로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출소 후 재범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



○ 여성·고령 등 수형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신설

- 여성 수형자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경북3(교) 등 4개 기관에 네일·헤어디자인 과정을 신설
- 고령화 사회 대비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를 위해 전주(교) 등 2개 기관에 버섯종균·거푸집 과정 신설

○ 출소예정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등을 위한 취업지원

-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출소예정자 취업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 '25. 6. 지방교정청별 주관(여주교 등 4개 기관) 전국 출소예정자 403명, 117개 업체가 참여한 행사를 개최하여 213명 채용약정 성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 수형자 4,444명 해당 프로그램 교육 이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하고 효율적인 취업역량강화 정책 지속 추진

- 인력부족 산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신설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 정신질환 수형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재활훈련 과정 확대 및 취업연계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국내외 경제상황 및 변화하는 산업전망과 취업수요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 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출소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작업 중심의 희망센터 발굴 및 확대와 작업장려금 인상 등 장단기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하였으나 체감 효과 다소 미흡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취창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출소예정자 취업역량 강화 및 실질적 취업기회 제공 정책 수립에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교도소 수형자 직업훈련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22명 참가, 금상 등 17명 입상’ 보도자료 배포 등 14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백석대 등 외부 전문기관과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범인식 개선 모형 개발 연구 진행
 - 수형자의 범인성을 고착화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를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기반의 집중인성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피해자 공감교육 운영 대상 확대
- 소년수형자 등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 인성 및 사회성 제고를 위한 소년·여성·장애인 등 취약수형자 맞춤형 체육교육 과정 개발 및 도입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처우 실시
 - 수형자, 직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을 활성화 하여 농번기 농촌 및 사회복지기관 일손 보태기 등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범죄를 반성하는 기회 제공
- 수용자 자녀지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업 추진
 - 자녀지원 방안 모색 등 수용자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확대 월드비전, 세움 등 외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수용자
 -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복지법」 상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협의, 문체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양육유아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자 자녀 맞춤형 도서지원 등 부처별 협력 강화

우수사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보라미봉사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상생형 사회봉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협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 고령농,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 적극 실시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수해 피해 복구 봉사 참여 ※ '25. 7. ~ 9. 11개 교정시설 봉사단 296명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소년수형자 맞춤형 교육과 관련하여, 집중인성 내 ‘피해자 인성교육’, ‘맞춤형 체육교육’ 등 다양한 교육 등이 시범 초기 단계에 있어, 운영방안이 안정화 되지 않고, 이에 대한 표본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년수형자의 학과교육 강화
 -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지표와 관련하여, 소년수형자의 학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 수립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15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2개 지연 - 인력·예산 등의 사유
	협업노력도	우수	· 집중인성교육, 수용자 자녀지원 제도의 성과를 위하여 외부 단체와의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현안 갈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게 평가됨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집중인성교육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등 의견수렴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필요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등 17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을 통한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 정신질환 수용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치료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문의 파견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25. 3.)

※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파견 ('25. 5.)

○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

- 의료장비의 디지털화·AI화 등 외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노후된 의료장비는 교체하고, 자동약포장기·디지털영상처리장치(DR) 등 첨단장비 도입 (디지털영상처리장치 등 15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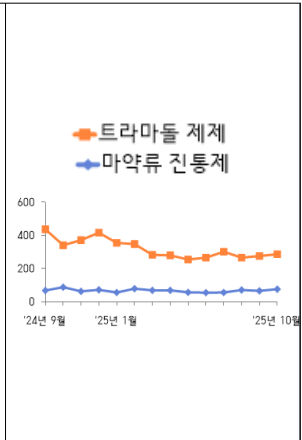
○ 약물중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 의료 활동 강화

-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제2판 발간('25. 2.)하여, 교정시설 내 동일한 처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처우 체계 마련
- 교정본부,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합동훈련(법무부-질병관리청-지자체)을 실시('25. 11.)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제고

우수사례

의약품 오남용 예방 정책으로 규제약물 투약자 비율 개선

-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개정('25. 3.)
 - 의약품 교부신청 시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의료적 약물로부터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 내 오남용 우려 약물의 유통 차단 효과
 -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제2판 발행('25. 2.)
 - 각 의무관마다 다르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도있는 의료처우 제공
- ☞ 마약류 등 규제약물 처방 건수: '24년 월평균 453건 → '25년 월평균 363건 (20%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오남용 방지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정책 수립 이후 효과를 단계적으로 점검·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향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도록 노력
- 정책 홍보 노력 부족, 성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나 수치 제시 필요, 효과성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속 추진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에 핵심적인 의무관 충원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수단을 강구, 결원을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 및 대외 환경 개선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진료기록 및 활력징후 작성 등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내용을 포괄하고, 난이도 및 측정산식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4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단체와 다각도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등 인식 저하로 인해 가시적 효과는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25년 신규지표로 적정 목표치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비의료적 약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약물(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절차를 개선하였고, 지속적 효과 창출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 체계성 우수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의약품 반납 폐기 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중 시범 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 의견 반영 · 혈액투석실 간호사 교육 요구에 따라 전문화 교육 과정 신설하는 등 정책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의약품 교부신청 안내서, 규제약물 가이드라인 등 8회 시설 내 홍보하였으나, 대외·대민 홍보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보통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죄유형별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재범 경험’, ‘피해자 공감’ 등을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적용함으로써 심리치료 효과성 제고
 - 5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총 22종 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 성폭력(6종), 아동학대(4종), 가정폭력(4종), 스토킹(4종), 마약(4종)
 - ※ 운영 기관 : 심리치료센터(5개), 심리치료과(5개), 부산·목포(교) 심리치료팀
- **고위험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SNS를 통해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고유한 특성* 및 범죄유발요인 분석
 -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도구화, 딥페이크 성인지 왜곡
- **수용자 심리상담 체계 개편을 통한 상담의 실효성 강화**
 - 기존의 복잡했던 5단계 심리상담체계를 수용자 정신건강 문제해결 중심의 3단계로 개편하여 실효적 심리상담 체계 확립
 - ※ 탐색상담(문제 탐색) - 집중상담(문제 해결) - 후속상담(해결 확인)
 - ‘심리적 위기 진단’ 도입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강화
 - 유관부서 간 심리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대상자 모니터링 강화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외부상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회기 확대(10회기→12회기) 및 ‘찾아가는 심신케어’ 운영기간 확대(대형기관 4일, 중소형기관 2-3일)
 - 교정사고 발생 직후 심리적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심리지원 고도화(추수상담 제공) 등 교정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 심리치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수용자 집단상담 기법, 심리검사 방법 등 업무담당 별 심리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및 범죄심리사 등 심리관련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 생애위기상담사 155명, 범죄심리사 51명 등 237명 양성

<p>우수사례1</p>	<p>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자의 범인성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교정시설 내 심리적 개입 필요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자 고유 특성 및 범죄유발요인 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 ☞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 재범 방지 도모 	 <p>딥페이크 범죄자 급증</p>  <p>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p>

<p>우수사례2</p>	<p>경북지역 산불화제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심신케어’ 긴급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 및 화재 진압에 따른 교정공무원 긴급 심리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4개 기관에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신케어’ 긴급 편성 -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불안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 신체적 피로누적 완화에 적극 개입하여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을 확산시키고 번아웃 예방 ☞ 위기 상황 발생시 조직의 회복력을 위해 즉각적·적극적현장중심적 대응으로 체계적인 긴급지원 실시 	 <p>교정공무원 산불 진압</p>  <p>찾아가는 심신케어 긴급지원</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위험 범죄자 증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심리치료 수요에 비해, 치료 프로그램 정책을 운영할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 부족
 -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정기관 심리치료 조직 및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성폭력·스토킹·딥페이크 범죄자의 지속적 증가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및 업무담당자 전문화 교육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난이도 및 측정산식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대학, 상담학회, 연구소 및 정신건강센터 등 과제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범죄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등 심리치료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료자의 재복역률 지속 감소하는 등 정책 체감 효과 우수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과밀수용으로 인한 상담 수요 증가,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개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심리상담체계 개편 및 「심리치료업무지침」 개정하는 등 정책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교정기관 심리치료의 전문성 및 효과성,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 적극적으로 14회 홍보하여 과제 추진 동력 강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마약류사범 재활전담교정시설 및 중독재활수용동 확대 운영
 - 대구교도소를 전담교정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여성 회복이음 수료자를 대상으로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
- 마약류사범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소관) 시행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직접 치료보호 의뢰 가능
 - 출소 전 중독재활전화상담을 전체 54개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
- 다양한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 도입
 - 미결·소년·잔형기가 짧은 마약류사범 등을 대상으로 중독단계 수준별로 1:1 개입하는 개별메타인지 프로그램 시행
 - 스스로 워크북을 작성하여 자기주도적 중독재활 패턴을 체화하여 지속적 단약유지를 도모하는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
 - 외국인 마약류사범(이수명령 병과)이 언어적 한계로 이수명령 집행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중독재활 워크북(영문·중문) 개발
- 쏠 수형자 대상 중독예방 교육 시행
 - 비투약 마약류 수용자를 포함한 쏠 수형자 대상 중독예방교육 필수교육 과정화 및 월 1회 중독예방강의 실시
-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이온스캐너 추가 도입
 - 각 교정시설의 신입실에 이온스캐너(마약탐지장비)를 설치해 교정시설 내 효율적 마약류 반입 차단

○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교정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전문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마약류 및 기타 물질중독 수용자 상담 및 중독재활 전문성 강화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정책 공감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 '24년 자체평가 개선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리플릿 및 회복수기집 제작을 통해 재활정책 성과 홍보를 강화

○ **마약류사범 재복역률 감소**

-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실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약류사범 재복역률이 전년 대비 2.2% 감소

우수사례	전 마약류사범 대상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최초로 근거기반 치료를 적용한 체계화된 자기주도적 중독재활프로그램 「다시있다」 워크북 개발 - 형확정 후 1개월 이내 출소 예정자, 환자 등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병과자의 이수명령 집행에 활용 - 쉼 수용기간 동안 마약류사범의 회복 단계에 따른 자발적 커리큘럼 참여 ☞ 5개 기관(대구부산경주청주여자(교), 인천구)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결과, 사전·사후 척도에서 단약자기효능감, 변화 확인, 우울불안스트레스, 회복 단계 영역이 개선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마약류사범 특성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필요**

- 소년·여성·미결수용자 마약사범 등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재활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활상담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객관적인 중독재활 효과성 확인 필요**

- 뇌파 및 생체신호 측정 기기 도입으로 마약류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사후 변화 양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마약 범죄 급증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7개 추진계획 중 17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대검찰청, 식약처,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이수명령 집행 강화로 마약사범 재범률이 감소 추세를 보여 정책 체감 효과 우수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성과지표 체계성 평이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중독재활 담당자 회의를 통해 고충 및 개선사항을 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리플릿, 회복수기집, 포스터, 언론 매체를 통해 마약류 사범 전담교정시설 등 마약사범 재활정책에 대해 14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77<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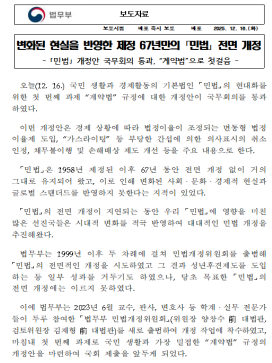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23. 6. 개정안 마련을 위해 양창수 前 대법관(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검토위원장) 등 민사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실무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개정안 마련 작업 착수
 - ※ 민법개정위원회는 기초위원회-검토위원회-전체회의의 단계를 거쳐 개정시안 마련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을 1차 과제로 선정
 - ▲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개선 등 “계약법” 개정안 마련 후 '25. 2.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5. 11. 법제처 심사 완료, '25. 12. 18. 국회 제출
- 거래안전·경제활동과 관련된 “담보법”을 2차 과제로 선정한 후 기초위원회가 마련('24. 9. ~ '25. 9.)한 개정안 예비 초안(100여 개 조문)에 대해서 '25. 5.부터 검토위원회 논의 중
 - '26. 개정초안 확정 후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예정
- 소멸시효 등 권리변동과 관련된 “권리변동법”을 3차 과제로 선정한 후 '25. 10. 개정안 마련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논의를 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

우수사례 “계약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5. 2. 7. “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
 - 입법 추진 배경, 대상 조문,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함께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배포
- '25. 12. 16.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배포
 - 입법 추진 배경에 설명과 함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한 보도자료 배포
- ☞ 정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고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서 관련 학회·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늘리고, 보도자료 배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민법 개정의 필요성, 입법 추진의 실효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법률 개정 절차 단계별 지표 반영이 필수적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건수, 개정안 마련, 학술대회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난이도 및 측정산식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21개 추진계획 중 16개 정상추진, 3개 지연, 2개 부진 - 법제처 담당자 인사이동 및 전면 개정에 따른 심사 장기화 등으로 법제처 심사 및 개정안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 - 위원회 안건 추가 등으로 전체 위원회 개최 일정 지연
	협업노력도	우수	· 학계실무계법원을 아우르는 협의체인 민법개정위원회와 가족법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해석상 전개되어 온 법리를 성문화하는 등 분쟁 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분쟁 비용 저감에 기여 예상 · “계약법”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담보법”, “권리변동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안대응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을 통해서 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 하여, ①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의 신설 근거를 보완하고, ②법인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변동형 법정이율제, 가스 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도입 등 8회 홍보하였으나, 입법 절차 지연 등으로 홍보 실적 일부 부진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2)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을 위한 인력구조 및 제도 개선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공증제도에 대한 이해,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 등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 신규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대상 직무교육 총 4회 실시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총 187개 지정고시
 -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 공증제도 이용 채무자에 대한 보호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완수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 기능을 지속적 개선·개발하여 국민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적극 제고
 - 지정공증인 신규 19인 임명하여 전자공증시스템 기능 교육 실시
 - 지정공증인 보조자 대상 전자공증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공증 이용 등에 관한 제도 안내
 - 전자공증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읍·면·동 단위 행정복지센터 홍보 리플렛 배포하여, 대국민 전자공증 제도 홍보
- 부적정한 공증사무 시정을 위하여 감독징계권을 적정히 행사
 -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총 24명의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 유럽, 일본, 중국 지역의 총 9개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

우수사례

전자공증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국민의 이용 접근·편의성 적극 제고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완수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함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기능 추가
 - 인증서 내 위·변조 검증 기능 강화
 - 정부 전자문서 지갑 통한 전송·유통 기능 신규 지원
 - 모바일 APP ‘편리한 공증’ 리뉴얼
- ☞ 국민의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접근성·편의성 적극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증 제도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항목을 점검하여 성과지표의 질을 제고하고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
 - 공증 제도개선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개별 성과지표 항목의 구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
 - 개별 성과지표 항목에 대한 측정방법 설정과 함께 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 달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지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세 검토할 예정
-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국민체감성 제고 필요
 - 전자공증시스템 개선 등으로 국민의 공증 이용 경험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설명할 예정
 - 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공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민체감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수요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전자공증 수요가 높은 기관 및 장소를 타겟으로 하고, 주요 수요층이 접근하기 용이한 홍보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홍보방안 마련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0개의 추진계획 중 10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관련 기관과 수시 협업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공증제도의 디지털 역량 제고, 국민의 공증제도 접근성·신뢰도가 제고되는 정책효과 달성 우수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 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으로 접수한 국민 의견 수렴하여, 공증인 대상 업무 처리방식 안내, 시스템 개선 등 공증 정책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전자공증시스템 홍보를 위한 지하철 역사 내 광고, 리플릿 등 3회 배포하였으나, 홍보 실적 미흡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해당	· 전략목표 III 관련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고손실 환수소송 총 8건 제기(소가 및 신청액 합계 29,723,785,672원)
 - '25. 1. 21. 방사청 육군운동복 납품계약 손해배상 소송 제기(소가 532,006,870원)
 - '25. 1. 24. 방사청 정보보안장비 구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제기(소가 531,000,000원)
 - '25. 1. 3. 국방부 펀드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상고심 제기(소가 24,975,632,059원)
 - '25. 3. 4. 법원집행관 업무과실 배상금청구 소송 제기(소가 333,194,180원)
 - '25. 6. 5. 방사청 탄약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레이돔 구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제기(소가 1,725,865,920원)
 - '25. 9. 3. 세종학당재단 연수 용역계약 불이행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소가 295,574,402원)
 - '25. 10. 2. 방사청 전투식량 유통기한표시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제기(소가 1,317,944,360원)
 - '25. 12. 5. 경찰청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소가 12,567,881원)
 - ※ '15. 9. 22.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후 '25. 12.까지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국가소송 총 757건 제기(소가 합계 약 6,678억 1,106만 원)
- 국고손실액 총 4,964,077,524원 환수 완료
 - ※ '15. 9. 22. 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 후 '25. 12.까지 합계 약 402억 8,423만 원 환수
- 상소제기 등 주요 소송행위 52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승인으로 환수소송 쉰 단계를 실효적으로 관리
- 소송수행자 대상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8회 실시, 각급 검찰청 송무지도 점검, 유관 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우수사례

살인예고 글 게시로 낭비된 국고 4,300만원 배상 확정

-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불안감 조성 및 막대한 공권력 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발생
- 경찰청, 서울고검 등과 협의하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
- ☞ '25. 10월 판결을 통해 다중 살인사건을 대비해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 4,300만 원 배상이 확정되어 국고손실 환수의 집행권원 확보, 향후 유사 소송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을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고손실 환수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절차별 단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소송 수행청 및 검찰청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
- 각 수행청과 환수 내역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여 판결 확정 후 실제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지원 및 감독을 확대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국가송무환경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여건을 분석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최종 환수금액 외에도 심급별 승소금액, 소송행위 승인 건수 등 소송 단계별 대표성을 가지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는 등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10개 추진계획 중 9개 정상추진, 1개 지연 - 9월 중 실시 예정이었던 광주고등검찰청 송무지도 점검이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연기되어 11월에 실시
	협업노력도	우수	· 경찰청, 국가유산청과 협업으로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 사건 및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에서 각각 국고 4,300만원, 1억 3,600만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협업 적극 수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국고손실 환수소송 8건 제기 및 약 49억 원 환수하는 등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였고, 형사행정 집행과 민사적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방지를 통한 반듯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 기여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소송 수행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환수조치 및 소송비용회수 문제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6년 정책 수립에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25. 9. 채널A 뉴스를 통해 “신림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경찰 7백 명 투입비 ‘4370만 원’ 배상” 1건 보도하였으나, 홍보 실적 미흡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통한 송무역량 및 소송지휘 강화

- 조달청, 관악세무서, 강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현안 소송의 유기적인 대응 및 분야별 실무 프로세스 방안 등 논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내용
관악세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관련 소송 대응
강서세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관련 소송 대응
서인천세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구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 소송 대응
조달청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및 실무적 이해

- 소송총괄관 회의를 통해 송무 해태 사례 등 송무 업무와 관련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대책 논의 및 소송수행정 애로사항 청취하여 법무부와 소송행정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및 다각적 송무교육 실시

- 주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40개 기관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 실시

점검확인	업무현황, 소송수행 해태 및 지연 등
지도전파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관련 유의사항 전파
청취수렴	수행정 건의사항(송무제도 및 전산 시스템 관련) 및 질의사항 등

- 소송수행자 대상 국가송무개관, 행정소송 서면 작성연습 및 답변서 발표, 행정소송 주요 패소 사례 및 공통법리, 공익법무관 상대 행정 소송 및 헌법재판 수행사례 등 교육 실시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기능개선을 통한 송무 업무 효율성·편의성 증진

기능 구분	탑재완료일
항소이유서미제출 현황 조회 기능 개발·탑재	'25. 4. 30.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개선	'25. 4. 30.
전자지휘 유형 및 실물기록 제작 여부 표기를 위한 UI 개선	'25. 5. 30.
보조 수행청 당사자 기능 표시 기능 개발·탑재	'25. 7. 11.
기타 지휘 항목 표기 기능 개발·탑재	'25. 11. 21.
수행정 소속 NDSL 회원 가입자 조회 기능 개발·탑재	'25. 11. 28.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내·외부 송무환경 및 실제 행정기관의 수요(지도·교육·의사소통 강화)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평가 자문단 의견(승소율 점수와 중요 조세·과징금·금액방어 점수 분리) 수용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6개 추진계획 중 16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의 활성화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및 방통위 관련 제제 처분 소송 등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 효과가 우수하나, 부서 주 업무인 항소소송 대응의 특성상 정책효과가 제한적임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수행청 건의사항 수렴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개선, 소송수행청 완결사건 소송문서 일괄등록 서비스 개선 등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시스템 개선 내역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게시 및 주요 소송지휘 내역 SNS 게재 등 대외적으로 7회 홍보 하였으나, 홍보 실적 미흡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법적 자문 역량 강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에 외부전문가(20명 위촉)와 내부 검사·변호사 직원이 함께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후 단절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 복원을 대비해 남북대화·협력 재개시 필요한 법적 쟁점 연구 등 법적 자문 로드맵 구축, 각 분야별 전문가 인재풀 확대 등 법적 자문 역량 강화
 -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법적 쟁점」, 「북한 개정 민법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제 개선 연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7회 연구 회의 개최 및 결과 도출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및 통일법무지원단 전체회의 개최('25. 12.)
 - 통일한국 형사절차법 연구,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남북관계 변화 대비 법제 정비 연구, 동서독 관계 변화에 관한 법제도 연구 등 8건 연구용역 실시
- 2025 「북한 형법 주석」 발간('25. 5.)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북한 형법 주석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집행

우수사례

2025 「북한 형법 주석」 발간배포

- 「북한 형법 주석」 발간
 - 2015년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이후 18회 개정, 290개 조문에서 329개 조문 확대된 최신 북한 형법 전면 개정판(1,128쪽)
 - 북한 형법의 조문별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법적 연구, 형법 부칙,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수록
- 「북한 형법 주석」 유관기관 배포 및 홍보
 - 통일부, 국가정보원, 법원, 검찰청 등 유관기관 245곳 배포
 - '25. 5. 30. 보도자료 배포(KBS 등 20곳 언론보도)
- ☞ 향후 남북 형사법 체계 통합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북한 법제 연구 초석



- 「제7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25. 6.~10.)
 - 국내 통일법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통일법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25편의 논문을 접수심사하고 우수작을 시상함으로써 통일법제 분야의 전문 인력 기반을 강화함
 - ※ 수상작은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수록
- 국내 통일법 분야 학술지 중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된 「통일과 법률」 발간(총 4회)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 800여 곳 배포
-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운영
 - 변호사 및 예비 법조인을 포함한 법조 인력을 대상으로 통일과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25. 11.~12., 63명 수강신청, 55명 수료)
- 법무연수원, 국가정보원 등 인력 대상 통일법제 및 정책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실효적인 권익 보장을 위해 법률 교육을 내실화함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검사·변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법률·인권교육 실시('25. 1.~12. 11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법률·인권교육 실시('25. 1.~12. 18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지원 변호인과 1:1로 연계하고, 법률 자문과 정서적 지지를 병행 제공함으로써 고립감 완화와 생활 안정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함
 - ※ '25. 9. 지원변호인 73명 위촉·활동
 -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운영을 통한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 활동
 - 온라인·카카오톡·유선 상담은 물론 변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 법률상담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입체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추진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협업 활동 지속 강화,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 및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매체 발굴 필요, 대외적 변수 고려하여 추진 일정 수립 필요, 성과지표의 질 향상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남북관계 개선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여 성과지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지표를 마련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15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1개 지연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현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과정 편성이 불가피해 지연
	협업노력도	보통	· 통일부·국정원·대한변호사협회·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였고 북한이탈 주민 지원, 협업활동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내실화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남북관계 개선 정체와 국민적 관심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 대비 정책의 장단기적 실효성 강화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서울남부하나센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 직접 현장 찾아가서 적극 상담·해결 · 지원변호인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5년 1분기부터 분기별 지원변호인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활동비 지급
	홍보노력도	우수	· 북한형법 주석 발간 보도자료 배포(20여곳 언론보도) 및 카드뉴스, SNS, 페이스북,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17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 보호 도모


※ 상법 1차 개정('24. 6. 발의한 정부안 중 전자주주총회 부분 반영, '25. 7. 공포)

○ 일반주주 의사 반영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통해 주주평등 원칙 실현 및 소수주주권 보호 간 균형점 모색

※ 상법 2차 개정('25. 9. 공포)

우수사례	상법 1, 2차 개정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 기여 ○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일반주주 의사의 효과적 반영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도모 <p>☞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되어 기업 가치 향상 및 기업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p> |  |
|--|---|

○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을 위한 상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법상 위임사항 및 추가 규율 필요 사항 검토 등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개정 TF」 발족 및 회의 진행('25. 10.~)

-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행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TF」 발족 및 회의 진행('25.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도산제도 개선**

- 파산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지속 추진

※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상정 및 대응('25. 9.)

○ **민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 유지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표현지배인 및 표현대표이사 관련 용어 정비, 민사 법정이율 개정에 따른 변동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안 내용에 맞추어 상법 개정 지속 추진

※ 입법예고('25. 4.~'25. 5.), 법제처 심사 완료('25. 11.), 국회 제출('25. 12.)

○ **기부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 추진**

- 수탁자 자격요건 명확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적용 배제, 운용방법 개선 및 공익신탁 관리감독 강화 등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 지속 추진

※ 부내 의견조회('24. 10.~'25. 2.), 관계부처(금융위, 행안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조회('25. 10.)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적 설정 필요**

- 2024년 신규 설정한 지표로 부내 유사사업의 성과 수준과 비교하여 2024년 목표치보다 상향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24년 실적보다는 그 목표치가 다소 낮음

○ **적극적인 대외 홍보 필요**

- 채무자회생법, 공익신탁법 등 입법 지연으로 대외적인 홍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최근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내 유사사업의 성과 수준을 비교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 예정
-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과제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 조기 추진**을 검토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법제 추진과 영세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도산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 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11개 추진계획 중 8개 정상추진, 2개 지연, 1개 부진 - 국회 법사위 일정 영향으로 일부 일정 지연,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연 및 부진
	협업노력도	보통	· 상사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회,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다소미흡 100%	· 최근 실적치 평균 이하로 소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일반 주주 의사 반영을 위한 상법 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도산제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하여 수정 방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하는 등 정책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상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및 쇼츠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6회 홍보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공익신탁법 등 입법 지연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대외 홍보 부족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47-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성공적 시행

- '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 최초 도입 이후 두 번째 시험으로 시험장 사전점검, 외부 전문인력 포함 전산감독 배치, 법전원 모의고사 실시 지원,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험관리관 교육 강화 및 매뉴얼 지속 보완을 통해 시험 운영의 안정성 도모
- 1. 14.~1. 18. 전국 25개 시험장에서 총 5,573명(연인원)의 시험 관리 인원 투입, 사고 발생 없이 시험집행 완료
 - ※ 총 3,763명 출원, 3,336명 응시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답안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
- 4. 24.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합격자 1,744명 결정

우수사례	CBT 방식 도입 · 정착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제15회 시험 응시자 중 99.9%가 컴퓨터 답안 작성을, 3명만이 수기 작성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24년 26명, '25년 8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 ○ 응시생들에게는 육체적 피로 감소, 시간 절약 등의 편리성, 답안 채점위원들에게는 악필에 따른 채점 곤란으로 인한 피로를 덜 수 있는 등의 호응을 얻으며 시행 2년만에 빠르게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 ☞ 필기 속도나 필체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답안 입력 시 오류 가능성을 줄여 더욱 정확한 성적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행정고시에 CBT 도입을 연구하는 등 타 국가시험에도 파급 효과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응시자 컴퓨터 답안 작성률 추이 (2024~2026)</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컴퓨터 답안 작성률 (%)</th> </tr> </thead> <tbody> <tr> <td>2024</td> <td>26</td> </tr> <tr> <td>2025</td> <td>8</td> </tr> <tr> <td>2026</td> <td>3</td> </tr> </tbody> </table>	연도	컴퓨터 답안 작성률 (%)	2024	26	2025	8	2026	3
연도	컴퓨터 답안 작성률 (%)								
2024	26								
2025	8								
2026	3								

○ '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성공적 시행

- 7. 26.~8. 2. 시험위원, 관리인원 등 총 43명 합숙 출제 진행
- 8. 2.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총 625명(연인원)의 시험관리 인원 투입, 사고 발생 없이 시험집행 완료
 - ※ 총 2,356명 응시, 2,170명 합격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 등 시험제도 내실화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4. 24.),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개선, 출제 및 채점기준 수립 등 사항 심의
 - * 위원장(법무부차관) 외 법전문, 대한변협, 법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22년부터 「법조인 선발·양성 TF」*를 운영하여 변호사시험 제도, 법조인 선발 등 주요 개선사항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 4. 제4기 TF를 구성하여 총 5회의 회의를 개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결정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고려사항 등 논의
 - * 대한변협, 법전문협의회, 교육부 및 법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 4. 15./5. 27./ 7. 1./11. 4./12. 2. 총 5회 실시
- ‘일본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연구용역 실시하여 외국 사례 수집·분석,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연구에 활용
- 법률 AI, 리걸테크 발전 상황을 고려, 미국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토대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 및 한국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 등 후속연구도 진행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반영 계획
- 선택과목 및 전문화 교육, 응시제한 제도 및 부정행위자 조치 등 개선을 위해 '25. 5. 프랑스 변호사 연수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자료 수집 등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논술형 답안 작성 부분에 한정,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채점, 문제은행 구축·관리, 출제 중복 검사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친 전산화는 미흡한 상황이며,
-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간 갈등 지속, 시험응시 제한, 선택과목 등과 관련된 시험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CBT 방식에 부합하는 체계적 시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 운영 과정의 전면 온라인 전산화 및 AI 활용 등 시험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차세대 시스템 설계·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 선택과목 개선 및 법학교육 실질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범조인 선발제도 개선을 목표로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시험의 성공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시험 출제 오류 방지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 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2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이해관계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협업을 도모하였으나, 이에 따른 변화 체감도가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다소미흡	·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의 조기정착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선택과목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현안 갈등 해소 노력 다소 미흡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보통	·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국회 토론회 및 포럼 참석, 관계자 면담, 수험생 민원 청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 시행 및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 노력
	홍보노력도	우수	· 통계자료 공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험 시행 등과 관련하여 16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1) 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 제도 개선 및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 민·상사 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결과 연구 및 국내 도입 추진
 - AI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최초로 참여하여 국제 AI 규범 스탠더드를 파악하고, 국내 AI 규범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논의 파악
 - ※ '24. 5. 세계 최초로 성안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AI와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을 마련한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참석
 -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월례 회의 개최('24. 9. ~ '25. 9., 총 12회)를 통해 이행법률 입법안 초안 성안
- 국제행사 개최하여 국제거래 규범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정부 및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2025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이하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을 개최하여 HCCH 주요 협약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 논의(6. 25.~27.)
 - * 1893년 국제사법규범의 점진적 통일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우리나라는 '97년 가입)
 -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CCH 주요 협약 이행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격년 개최(우리나라는 '17년 법무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 개최한 이후 8년 만에 재유치)
- 캄보디아 조정법제 정비사업(5개년, '21.~'25.)의 최종 목표 추진
 - 캄보디아 조정인, 법무부 공무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초청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조정법제 비교법 연구 및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초안 작성

우수사례**HCCH Asia-Pacific Week 2025 개최**

- 국제사법 관련 전문기구와 그 주요 협약의 주무 기관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로 보다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공동 주최 기관(8개)과 가족법 관련, 사법절차 관련,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 관련 세션 진행
 - 6. 25. ~ 27. 3일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정부·학계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하여 HCCH 주요 협약 및 국제사법 최신 동향 논의
 - ☞ 최신 국제규범 동향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하고, 국제사법 분야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국제사법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내실 있는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관련 경험이 풍부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량과 사업 효과 제고 도모
 -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선안을 '26년 시행 계획에 반영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책 기대 효과를 측정하고 설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상황 및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 등 여건을 분석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있으나, 측정산식이 단순투입 지표 위주로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4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국제 업무 수행 시 타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글로벌 협력하였으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달성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적극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입법안 관련 세미나, 종사자 간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안 마련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에 대한 세미나,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협회 간담회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4건 홍보하였으나, 대국민서비스 비중이 높지 않은 국제법무 정책 특성상 홍보 노력 강화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소송 직접 수행·관리 및 승소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 성과
 - 정부부처·지자체 등이 당사자로, 개별 대응에 어려움을 표한 주요 국제소송을 직접 ▲법정 변론, ▲서면·증거 제출, ▲자문 제공 등 ‘정부의 로펌’으로서 임무 수행(연중)
 - '25. 12. 현재, 국제법무지원과는 15건의 주요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 약 50건의 국내외 국제분쟁 등을 관리 및 자문 제공 중(연중)
 - ※ ‘구글·메타’ 등의 국내이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건(처분청:개인정보위), ‘ELTA’, ‘tkMS’ 방산업체 납품지연 사건(처분청:방사청) 등 도합 소가 약 6조원 상당 국제소송 수행·관리 중

우수사례	구글, 메타 등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련 소가 110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취소소송 전부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제기 단계부터 본 사건에 관한 법률지원을 요청받아, 주기적 전략회의를 개최, 특히 구글·메타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적극 주장(EU·미국 등 타 국가도 유사한 제재를 해왔음) ○ 그 결과, '25. 1. 23.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구글 및 메타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 <p>☞ 국제법무지원과 전부승소 성과</p>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노력 및 국제협정 개정 참여
 - 12년간의 주요 ISDS 사례, 대응경험, 해외판정례 등을 총정리한 교과서 ‘ISDS 예방 체크리스트’ 개정본 작업, ▲법무부 및 타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ISDS 예방 세미나’ 진행
 - 국제분쟁의 근거 규정이 되는 국제협정(FTA·BIT) 관련, ▲한영 FTA 협상 투자부문 검토 및 협상단 참여('25. 12. 한영FTA 체결), ▲한-대만 BIT,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참여

- 해외진출기업·소상공인 대상 무료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강화 성과
 -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 등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서면자문 및 실시간 상담, ▲국내외 유관기관(무역협회·코트라 등)과 공동 법률상담회 개최, ▲최신 AI·ESG·공정거래 법제분석 업무 수행

우수사례	2025년 총 485건의 법률자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12. 31. 기준,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485건 제공, ▲일본브리징 호주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 대상 현지 법률설명회 5회 개최, ▲최신 주요 '해외규제 모니터링' 자료 총 4회 발간, ▲수출 바우처 소진 기업을 위한 연말 집중 법률상담회 개최(60개 이상 기업 지원),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및 공기업 대상 국제법무 관련 자문의견 제공을 통한 수출 경쟁력 증진 및 법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3년 과 신설 이후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신설 부서 특성상 업무환경 및 수요가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목표 설정, 정책효과 분석 등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음
-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 업무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업무 전반에 걸친 정책효과 분석 강화 등을 통해 부서의 국제법무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률 자문 제공
 - 더욱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조사 및 홍보 노력 증진
 - 일본, 호주 등 현지 법률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현지 설명회 추진
- ISDS 예방 활동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정비 등 ISDS 예방 대책 강화 방안 적극 검토
- 적극적인 성과 목표치 설정 및 정책효과 분석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ISDS 예방, 국제협정 검토 등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법무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하여 소송지원 업무의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다소미흡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평균 이하로 소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관계부처, 유관기관, 피지원 기업에서 국제법무지원과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개선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해외법률지원 관련 현지 세미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보도자료 배포 등 9회 홍보하였으나, 글로벌 펠로우십,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외 홍보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도 정책 추진 성과를 쉽게 인지시키도록 노력하여 국제법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
 -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
 -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 및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
 -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함
 -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하였음**

우수사례	13년간의 분쟁 결과, 약 4,000억 원 규모 국부 유출 차단 등 대한민국 정부 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규모의 ISDS 사건으로, 2012년 분쟁이 개시된 이후 양측의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SID 취소절차에서 취소신청이 전부 인용된 사례는 1.5%에 불과 ○ 정부는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본건 취소절차를 수행한 결과, 4,000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 차단 	

○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대응 활동

-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 7건의 증거수집, 서면공방, 구술심리 참석 등 사건 수행
- 특히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판정문의 중대한 판단 오류를 시정하고, 국고 손실의 방지를 위해 정부 측 취소신청·소송 제기하여 적극 대응 중
- 정식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나,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대응단 구성, 법률검토 및 사전협상 등 진행

○ 국제투자분쟁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공식회의 및 기타 ISDS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발표,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ISDS 제도 및 중재규칙 개선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반영 노력

우수사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 참여
<p>○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內 ISDS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여 ISDS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제시</p>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재절차상 기밀유지명령 및 소송전략 노출 우려 등 사유로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알림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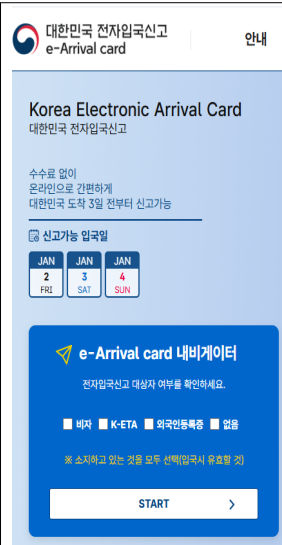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2개 추진계획 중 12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범정부적 ISDS 대응 체계 확립으로 론스타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하였고,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 및 갈등 신속 대응으로 정책 효과 적극 달성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정책이해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ISDS 정책 수립에 반영
	홍보노력도	보통	· 보도자료 배포 등 13회 홍보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노력 필요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자입국신고 제도(e-Arrival Card) 시행('25. 2.)
 -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
-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 도입('25. 4.)
 - 기존 실물 카드로만 발급되던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VABTC) 도입
- 외국인 기업인 입국심사 편의 방안 마련('25. 8. 31. ~ 12. 31.)
 - 경제단체(6곳)*에서 추천한 외국 기업인 및 동반인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전용 입국 심사대 시범 운영(인천공항)
 -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25. 9. 29. ~ '26. 6. 30.)
 - 관광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15일) 허용
- 캄보디아 등 출국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출국단계 안내 강화('25. 10.)
 -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출국 초기 단계에서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방문 위험성 및 긴급연락처)* 강화
 - * 자동출국심사대 모니터에 안내문 표출, 유인심사대 및 탑승게이트 앞 (항공사 협조)에서 안내문 배포
- 제주 크루즈 자동심사대 설치('25. 12.)
 - 크루즈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입항 횟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에 자동심사대 38대(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 최초 도입

- 자동심사대 등록 대상 외국인 전용 입국 심사구역 시범운영
 -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적 증가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대만, 홍콩, 마카오, 독일) 국민 대상 전용 심사구역 시범 운영
- 전자여행허가(K-ETA) 2차 고도화 사업 완료('25. 12.)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원 언어(튀르키예·카자흐스탄 언어) 추가 ▲심사 고도화를 위한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보강 등

<p>우수사례</p>	<p>입국편의 제고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p> <p>-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은상 수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25.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단체 관광객의 경우 일괄 입력 기능이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 로 신고 가능) - (제출 시기)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 받기 전까지 ☞ (효과 및 성과) 이용률 약 38.74%(시행 후 ~ '25.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신고서를 입국 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완화 및 입국심사 대기시간 감소 - 입국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기록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 -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으로 종이 입국신고서 제작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자여행허가(K-ETA) 통계·분석 시스템 관련 AI 기술 활용 등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입·추진 필요
 - 향후 AI를 활용하여 전자여행허가(K-ETA) 통계·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허가자의 정보를 자동분석·활용하여 신청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여행허가 처리 결과 제공 예정
- ※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국정과제)을 위해 AI K-ETA 시스템 도입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신청 예정('2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 외부환경 등 여건분석, 상위목표와의 체계성, 소통계획 등 평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며,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3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성공적인 출입국심사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다양한 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정책효과 창출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자동심사대 전용 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등 정책 시행 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16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4)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 현장 등 방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자체·민간의 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한 분야 등 민간의 비자정책 개선 수요에 대해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적 타당성 검토 후 비자제도 개선(’25년 제안서 25건 검토, 12건 수용 결정)
- 비자제도 개선으로 구인난 심화 산업분야에 외국인력 도입 지원
 - (국정과제 56) 우수 해양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에게 전문직업(E-5) 자격 부여(’25. 4.), 자동차 부품제조원(’25. 5.), 자동차 판금·도장원 직종 신설(’25. 10.)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제·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확대
- (국정과제 22, 27)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정부혁신, 적극행정 선정제도)·확대 및 K-STAR 비자트랙 추진
 -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첨단분야 국내 우수인재들이 성장·정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시행(’25. 4.) 및 분야 확대(’25. 9.)
 -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 운영을 위해 참여대학 선정 완료(’25. 12.)
- 유학생 구직(D-10)비자 개선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정착 지원
 - 「해외 유망인재 인재풀 확보를 위한 구직(D-10)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25. 10.)
- (국정과제 69)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지속 확대

- 공공형제도 및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제도 시범 운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형태의 다양화
-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담 업무 플랫폼 구축 추진,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안전 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등 계절근로자 안전·인권 보호 강화
-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25. 10.)
- K-메디컬 글로벌화 가속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여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 추진('25. 9.)
- (대통령 지시사항)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방안 마련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원스톱솔루션센터 연계를 통한 핫라인 구축,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보제공 안내문·카드 배포 등 외국인 노동자 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

우수사례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최우수인재 대상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시행('25.4.) ○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 확대('25.11.)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분야 외국인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는 파격적 유인책으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시행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 ※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1명 최우수인재 12명 및 배우자·자녀 9명 발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적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성 하에 유관부처와 협의 노력 강화 필요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회의, 간담회 개최 등)하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 추진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외국인 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조치사항을 지표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3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TF 구성), 인사교류, 부처 의견수렴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정책효과 창출 · 국민체감 성과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 수상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의료업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유치활성화를 위해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및 유치기관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함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제작, 인터뷰 등 17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해당	· (국정 6-4)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략목표 반영도	해당	· 전략목표Ⅳ 관련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글로벌인재비자센터)	

(1) 평가결과

주요성과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년 ~ '27년) 3년차 추진으로 불법체류자 수를 '25. 1월 39.4만 명대에서 '25. 11월 36.3만 명대까지 감축(3만 명 감축)
 - **(정부합동단속)** 5개 부처 참여, '25년 총 2회 실시(①4.14.~ 6.29. ②9.29.~12.5.) 및 역대 최대 단속실적(46,158명) 달성
 - **(특별자진출국)**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출국을 유도('25. 12. 1. ~ '26. 2. 28.)

우수사례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통한 국민 안전 도모						
<p>○ 불법체류 외국인 '24년 12월 대비 약 3만명 감소(9.1% 감소)</p> <p>- ('24. 12.) 397,522명 → ('25. 5.) 381,216명 → ('25. 11.) 363,689명</p> <p>☞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서민 일자리 잠식에 대한 대응 및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방지 등 국민 불안 요소 해소</p>	<p style="text-align: center;">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추이</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h>연월</th> <th>인원</th> </tr> <tr> <td>2024.12</td> <td>397,522</td> </tr> <tr> <td>2025.11</td> <td>363,689</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9.1% 감소</p>	연월	인원	2024.12	397,522	2025.11	363,689
연월	인원						
2024.12	397,522						
2025.11	363,689						

- **보호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강화**
 - 기존에는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보호기간 상한*을 도입하고, 보호개시 및 보호의 연장 시 독립적 심사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
 - * 9개월(중대범죄자 및 난민신청자는 20개월)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구제 대책 마련

-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 11. 6. 공포 및 시행)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강화(안내문 부착)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보호외국인은 직권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지시('25. 9.)
- ※ '25. 12. 29. 보호외국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용부와 협업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감축 및 인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학계·시민 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제도개선 예정

○ 보호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평균 보호기간 지표에 대해 중장기적 목표 설정 필요

- '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 불만 증가 및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우수	· 관계부처와의 정부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역대 최대 단속실적을 달성하였고, 주한 공관원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인권 강화 방안 모색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농어촌 및 산업계의 인력난, 단속 시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 요소 등을 감안하여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인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관계부처 초청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방안'을 연장하고, 언론 및 인권위 등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형사범 불법체류자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공조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구제방안 마련
	홍보노력도	우수	· 기획조사, 정부합동단속 등 관련 보도자료 등 15회 배포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청 심사지원과(퇴거집행팀) 방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행('25. 1.)

- 실물에 비해 편의성·안정성이 우수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으로 외국인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체류 만료일 등 맞춤형 민원 정보 실시간 제공('25. 1.)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건수 : '25. 12. 기준 36,383건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금융거래 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실명 확인증표로 인정('25. 3.)되었으며, 민간앱(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등)을 이용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개시('25. 7.)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25. 5.)

- 우체국, 저축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25. 5.)과 소액 해외송금업*('25. 12. 예정) 대상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추진하여 외국인 금융생활 편의 증대

* 모바일앱 기반 해외송금, 환전, 해외 결제, 외환결제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발급 편의 확대를 통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p>○ '25. 1. 10.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인정('25. 3.)되었으며, 민간앱(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등)을 이용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개시('25. 7.)되어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향상 됨 	

○ 개인 맞춤형 비자·체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25. 5.)

- (비자내비게이터 구축) 하이코리아 회원을 대상으로 취업, 구직, 창업 등 선택 유형에 맞는 추천 체류자격, 세부 요건, 구비 서류 등에 관한 맞춤형 정보 제공
- (민원 정보 접근성 향상) 하이코리아 초기화면에서 비자내비게이터,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등을 클릭 시 바로 진입되도록 개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과제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추진”의 목표치가 단순히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 건수로만 산정하고 있어, 연계 실적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장 중심의 질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출입국정보 업무 활용 실적(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26년도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하여 향후 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표 설정 검토 필요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4개 추진계획 중 14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행안부와 협업하여 내·외국민 주민세 과세 정확성을 제고하고, 질병청과 협업하여 외국인등록정보를 연계하였으며, 향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모바일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여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 발생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보통	· 주요출입국자료 연계기관 간담회,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수행
	홍보노력도	다소미흡	· 카드뉴스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10회 홍보하였으나, 홍보 실적 미흡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장 C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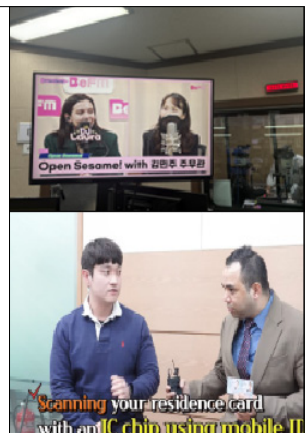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안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 내·외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간담회와 업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주요 정책(신출입국·이민정책, 광역형 비자) 내·외신 언론 브리핑 개최('25. 4.)
- 외국인 정책 수요자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추진
 - 내국인 중심의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언어·문화적 장벽을 고려한 외국어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재한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
 - ※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전자입국 신고서 관련 외국어 동영상 제작('25. 3., '25. 4.)
- 이민정책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부정적 인식 해소
 - 주요 허위·왜곡 정보를 신속히 바로잡고, 정책의 배경과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반이민 정서 확산 가능성을 완화
- 다문화 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다양성의 가치 확산 추진
 -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세계인의 날, 한마음 걷기 대회 등)을 마련하고, 재한외국인의 사회 기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소개

우수사례	외국인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추진
-------------	---------------------------------------

-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재한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새롭게 기획하여 추진함
- 직원이 직접 영어로 정책을 전달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구성을 도입
- 대중매체(영어 방송)에 직원이 출연하여 이민정책을 영어로 소개, 방송매체의 광범위한 시청자층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정책 홍보의 파급력을 강화
- ☞ 외국어 정책 홍보영상은 높은 조회수와 주한 외국공관의 감사 메일 회신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산영어방송과의 협업 홍보는 청취자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정규 방송 편성으로 이어져, 정기적인 정책 홍보 채널을 신규 확보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기반 홍보 확대 및 홍보 수요조사 반영

- 현장투어, 박람회,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현장 접점에서 사전에 참여 대상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소개를 강화하여, 각종 행사를 정책 홍보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홍보 효과 체감도 확대 필요

○ 오해·가짜뉴스 대응형 홍보 체계 구축

- 이민정책 관련 오해·허위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팩트체크형 홍보 콘텐츠를 기관 소식지(공존)와 다양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유튜브)를 통해 전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 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3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협업 과정에서 홍보 채널 확대를 위한 긍정적 노력이 있었으나, 향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일방적 요청에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접근을 통한 협업 파트너 발굴 등 지속적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여러 채널을 통해 정책을 전달한 홍보실적을 종합하여, 기관의 정책 홍보 실행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함 ·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정책 고객의 피드백을 평가하여 소통의 효과성을 점검함 ⇒ 최근 실적 추세를 상회하는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행으로 목표 성과를 달성
	정책효과	보통	· 정책고객의 수요에 맞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함. 그러나 현장 홍보를 확대하여 정책 고객의 니즈를 직접 청취·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실질적 개선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출입국 사칭 보이스피싱 심각성 및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홍보 부족 등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에 다각적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신속 대응
	홍보노력도	우수	· 14회 보도자료 배포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소통형 홍보활동 현장 소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24년 추진실적 평가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해 종합평가,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에서 심의·확정
- ※ '25년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 (중앙행정기관) 157개, 3,667억, (광역지자체) 1,347개, 3,299

○ 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추진

-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간 외국인력 도입을 산정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 시행
-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핵심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25.4),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E-7-4R) 신설 등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소관 위원회)를 통한 정책 추진

- 정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실무)(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한 이민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심의
- ※ 외국인정책위원회(3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1월·2월·12월), 거주통합국적실무분과위(8월) 개최
- 지역기반 비자 제도개선 및 현안 토의 등 지지체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5회)
- ※ 1차 영남권(6월), 2차 수도권(7월), 3차 계절근로(8월), 4차 호남제주(11월), 5차 강원충청(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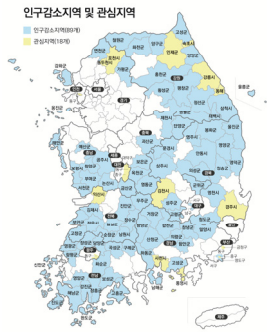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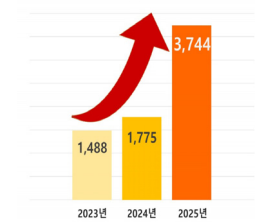
○ 출입국·이민정책 연구 및 과제 발굴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AI를 활용하여 창의적·혁신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제1회 이민정책행정 혁신발표회」 개최, 해외 이민정책 동향 조사연구* 등
- * 비자체계 및 특징(미국·캐나다·독일), 직업소개사 제도(일본), 2025 영국 이민백서 번역 등

○ 국민 공감대 기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다각적 의견수렴 노력

- 국회 토론회 참석(총5회) 및 언론안학계 등 민간과 정책현안(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이민정책포럼(2회, 총 280명 참석), 사회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부직원과 정책방향·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정책포럼(총8회) 개최 등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선정(총 24개)**
 -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학위 취득부터 취업·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25. 8월~)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 및 현행 저임금단순노무 위주의 외국인력 제도를 적정임금에 기반한 장기 정주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추진
 - ※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 ('25. 12.~1.) 모집 공고 → ('26. 1~2.) 학과 선정 및 시행 예정
-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대응**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및 타 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등(총 21건)

우수사례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p>○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우수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 기여</p> <p>☞ 효과 및 성과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역특화비자 총 9,178명 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F-2-R}) 유학생 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25. 11월 기준 3,457명 - (동포^{F-4-R})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 취업활동 제한 등 완화 ☞ '25. 11월 기준 391명 - (숙련기능인력^{E-7-4R}) 비전문인력으로 2년이상 체류한 근로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25. 11월 기준 2,779명 - (지역특화비자 동반가족^{F-3-R}) 2,551명 <p>☞ 연도별 허가 현황</p>		 <p>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지역특화형 비자</th> <th style="width: 12.5%;">2023년</th> <th style="width: 12.5%;">2024년</th> <th style="width: 12.5%;">2025년 (11월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우수인재(F-2-R)</td> <td>1,418</td> <td>1,615</td> <td>736</td> </tr> <tr> <td>재외동포(F-4-R)</td> <td>70</td> <td>160</td> <td>229</td> </tr> <tr> <td>숙련기능인력(E-7-4R)</td> <td colspan="2">※ 해당사항 없음</td> <td>2,779</td> </tr> <tr> <td>합계</td> <td>1,488</td> <td>1,775</td> <td>3,744</td> </tr> </tbody> </table>		지역특화형 비자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기준)	우수인재(F-2-R)	1,418	1,615	736	재외동포(F-4-R)	70	160	229	숙련기능인력(E-7-4R)	※ 해당사항 없음		2,779	합계	1,488	1,775	3,744	 <p>연도별 허가 현황</p>
지역특화형 비자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기준)																			
우수인재(F-2-R)	1,418	1,615	736																			
재외동포(F-4-R)	70	160	229																			
숙련기능인력(E-7-4R)	※ 해당사항 없음		2,779																			
합계	1,488	1,775	3,74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 및 갈등 해소 사례 발굴 필요**
 - (협업노력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협업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사례 발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협업활동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협업활동 추진체계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17개 추진계획 중 16개 정상추진, 1개 부진 - '25.12.22 개최 예정이던 「제31차 외국인정책위원회」가 12.11.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로, 위원회(장관급 행사) 행사 일제 연기 및 위원장(국무총리) 사정으로 연기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현안(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효과 마련(달성)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기반 비자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지역우수인재 소득요건 변경 등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등 17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등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 (우수인재 심의)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문화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76명에 대한 우수성과 국익 기여 가능성을 심의하고 51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 부여
 - ※ (위원 구성) 위원장(법무부차관) 및 위원 29명(정부 7, 민간 22)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국적정책 추진
 - (국적증서 수여) '25. 8. 12.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 전반에 애국심을 고취
 - ※ 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7명의 후손 2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
 - (특별공로자) '25. 5월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한 한 폴란드 국적 '스비에르제브스카 마리안나' 수녀에게 특별귀화 국적증서 수여
 - ※ '92년에 입국하여 32년간 농촌·산간 지역에서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
- 정책수요자의 정보접근성 및 인권 강화를 위한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예규) 개정
 - (정보접근성 강화) 정책수요자의 지침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적업무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적행정의 일반사항 규정 및 비공개지침을 일부 공개하여 규정하는 등 정책수요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 (인권 강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 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대체 가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개선 의견(정책수요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모색)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우수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3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 추진하였으나 국적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우수	· 핵심 우수인재 선제적 유치·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긍정적인 정책효과 창출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 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다소미흡	· 국적제도 설명회, 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정책 반영 다소 미흡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안내 등 15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5. 3. 장동혁의원/ '25. 8. 박균택의원)
 -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17개→23개, '25. 7.) 및 '26년 예산 확보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등이 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단순노무 취업활동 허용('25. 7.)

우수사례	무국적 동포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사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및 방문취업(H-2) 자격과 동일 업종(단순노무)에 취업활동 허용('25. 7.) ☞ 무국적 동포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체류·생계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 허용함으로써 무국적 동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포용 및 보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방안 마련 		

- 체류외국인 증가, 체류유형 다양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확대·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보건 및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이민자 조기적응 및 국민 안전 지원(기존 3시간 → 5시간, '25. 2.)
 - '26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전면 시행에 대비, 교육 운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시범실시('25. 10.)
 - ※ 전남·경북·경남 지역(9개 기초지자체)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25. 10.~12.)
 - 외국인 인권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민교육에 노동인권 및 가스안전 교육 추가('25.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존과정(한국어, 한국문화 등)과 다른 내용의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공모 제1차 시범사업」 실시('25. 11)

우수사례 |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시범사업 실시

-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자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과정(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회이해)과 다른 체험·소통, AI 활용 교육 등 미래 산업 분야 등에서 Bottom-up 방식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 실시('25.11.)

※ 직업체험·소통 분야 6건, 미래산업분야 3건, 기타 1건 등 10건 선정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성과 특색이 있는 교육 제공함으로써 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자립 지원

- 이민자 멘토단이 학교로 찾아가 학교 내 정착 초기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25. 5.)

* '24년 시범실시 10회(1시간) → '25년 40회(2시간)

-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주배경 학생 대상 조기적응 교육을 학교에 찾아가는 형태로 추가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25. 7.)

※ '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하여 10개 학교에서 시범사업 진행(162명 참여)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5.20.) 및 제12회 한마음 걷기 축제·정부합동 고충 상담 행사 개최(서울^{10.19}, 수원^{10.25}.) 등을 통해 국민과 이민자 간의 소통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인식개선 메시지 전달 노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및 부처와의 협업 강화 필요

-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이민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한 유관기관·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하어 신규 지표 발굴 검토 필요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5개 추진계획 중 15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다소미흡	·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 다소 미흡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균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국민의 반이민정서를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효과 발생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보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 등 현장의 의견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 등 15회 홍보 실시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미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난민심사처우 개선 : 최신 판결동향 반영 난민의 권리 보장 강화
 - 난민면접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공개 조치
 - 난민인정자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난민심사 회부,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를 하도록 심사방향 지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지속
 -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난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난민심사 거점 기관으로 수원청을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보호소 등 난민심사 화상 면접 운영기관을 확대
 -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평가를 통과한 147명의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 우수한 통역인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통역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정
- 국민의 난민정책 신뢰 제고 및 난민 인식 개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난민제도 시행 후 30년간의 난민통계 공개
 - 산불 피해지역(경북 영덕군)에 재정착난민이 방문하여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활동을 통해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도모

우수사례

산불피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난민 인식 개선

- 경북 산불피해지역에 재정착난민 방문 및 복구 지원활동
 - 4.12. 재정착난민 25명 등 총 34명이 경북 영덕군의 주민회관, 경로당 등의 잿가루제거, 화장실 청소, 구호물품 운반 등 봉사
- ☞ 갑작스런 산불로 황폐해진 지역에 난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넬으로써 난민이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국민과 난민의 교류·화합의 장 마련



○ 재정착난민 사업 지속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 태국 난민캠프 내 미얀마난민 56명을 재정착난민으로 국내 수용하고 태국 현지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업체계 강화
-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참석, 제115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석, 제76차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참석, 주한 남아공대사 면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등 국제협력 강화

○ 갈등 예방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전문가 간담회, 인도적체류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난민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난민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도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세분화 및 다양화

-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 지표의 10개 구간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균등하게 설정할 필요
- 처우지원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기 지급 등의 지표 추가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부환경 등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난민심사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처우지원(생계비 지급 실적)은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평이
	추진일정의 충실성	다소미흡	· 14개 추진계획 중 13개 정상추진, 1개 부진 - ‘난민제도 남용방지 난민법 개정안 마련’ 계획 차년도 실시
	협업노력도	우수	· 범정부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여 난민인정자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이태원참사 특조위와 협조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업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100%	· 최근 실적 추세치 수준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확충 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난민 인식 개선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 우수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해당없음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립 및 반영도	우수	·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인에 대한 난민심사체류방향 설정 등 정책 반영 우수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포스터, 소식지 배포 등 15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난민대기실 방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난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을 개정하여 난민위원회 서면 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사 처리량 증대 및 심사 기간 장기화 해소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및 조사기법 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주제별 국가정황정보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정황조사관이 1차 난민 심사 기관을 권역별로 방문하여 국가정황정보 조사기법 등 교육 실시

*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체계, 주요 사건 등을 의미하여 난민심사 시 핵심 판단 자료임

○ 국제기구와 협업으로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및 국가정황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의신청 심사 등의 전문성 강화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문자 알림 실시

-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서 e-book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발간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난민신청자의 진술 및 제출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식, 귀국 시 박해 또는 위협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다룬 안내서 발간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 워크숍 논의 결과 안내서 반영 및 1차 심사기관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우수사례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차년도) 완료**

- 난민심사 시 핵심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국가정황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을 위한 통합 DB 구축
 -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등 웹사이트에 공개된 난민신청 다발 국가 국가정황정보 자동 수집 → 수집된 정보 한국어로 기계 번역(영어·불어·독일어·아랍어)
 - ※ '21년 국민참여예산 제도 최상급 평가 획득 사업
 - ☞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활용하여 난민심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 기간 장기화 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국익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심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난민 이의신청 심의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연구자료 발간 시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난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도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 다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소미흡	· 관리과제를 포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항을 지표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난이도 및 측정산식의 체계성 등 다소 미흡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 중 11개 정상추진
	협업노력도	보통	· 국제기구와의 교육 협업, 국가정황정보 DB 구축 관계기관과 협력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업 노력 필요
2.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100%	· 최근 실적 추세치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
	정책효과	보통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이의신청 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기적인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책환류 성과	우수 우수	· 미흡부진과제 개선 보완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 발생 ·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 정책에 충실 반영
3. 정책 소통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우수	·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 난민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매뉴얼 및 국가정황정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 적극 반영
	홍보노력도	우수	·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제작 등 16회 홍보
	정책자료 제공 노력도	우수	· 자체평가 위원에게 월별 정책자료 제공 충실
<가점>			
국정과제 반영도	미해당	· 해당없음	
전략목표 반영도	미해당	· 해당없음	
자체평가위원 소통 노력도	해당	· 11. 1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대기실 방문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공정거래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공정위와의 협조체계 강화	○ 공정거래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연중)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정제재 협의회 등을 통한 금융위, 금감원 과의 협조체계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정제재협의회 개최(연중)
	○ 보이스포싱 국외도피사범 추적 및 외국인사범 검거 등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지속 강화 필요	○ 해외 거점국 보이스포싱 전담수사관 파견 확대 추진(연중) ○ ‘초국가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회의’에 참여 하여 대응 방안 추진(연중)
2	○ 범정부적 대응체계 검토 필요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체계 장단점 분석 등으로 ‘마약청’ 등 독립된 마약 단속기구 설립 검토(상반기)
	○ 홍보·예방활동 강화 필요	○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 전개(연중)
3	○ 실적 측정기준(유관기관 회의 실적 1건당 2점, 양형의견서 제출 시 1건당 2점)에 대한 실질화 필요	○ '26년 '개최횟수(1점), 참여기관 수(1-2점), 개최 시기(1-2점), '개최 내용의 중요성(1-2점)' 등을 고려 차등 점수 부여(성과계획 수립 시) ○ '26년 점수 비중을 실질화하여 의견서 제출(1점), 대상 범죄 설정(3점), 양형기준 마련(5점) 등으로 차등 점수 부여(성과계획 수립 시)
	○ 홍보실적 관련 평가지표 개선 필요	○ '26. 홍보실적 실적 측정치 다분화(성과계획 수 립 시) - 주요 공영방송(TV), 신문(중앙 일간지) 보도 2점 - 지방 신문, Radio 및 종편방송 보도 1점 - 유튜브 및 포털사이트 0.5점 ○ 유관기관 회의 경우, '개최횟수(1점), 참여기관 수 (1-2점), 개최시기(1-2점)', '개최 내용의 중요성 (1~2점)' 등을 고려 차등 점수 부여(성과계획 수립 시)
	○ 정책환류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연 단위로 연속 관리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정책 성과 창출(성과계획 수립 시) - 성과지표 구체화, 측정성과 지표 다분화·실질화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과 관련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 검토(성과계획 수립 시) - (단기) 의견서 제출 - (중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포함 - (장기) 대법원과의 협업 및 양형기준 마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신속한 해외 소재 증거 수집 및 범죄인 송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확대(연중) ○ 범죄인 송환 등 국제형사공조실적 증가(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한국요청과 외국요청 사건의 난이도를 부여하는 등 측정산식 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계획 작성 시 측정산식 개선(시행계획 수립 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 개정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몰수제 도입,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제 발굴·확대(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노력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실적을 창출하고,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연중)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적절한 형사사법관계 입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법」 개정 등 시의 적절한 형사관계 법령 입법화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성화 및 평가위원 정책자료 제공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료 3회이상 제공 노력(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법령의 입법예고와 국회 통과 등을 차등하여 가중치 재설정 예정(시행계획 수립 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1 전자감독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행동관찰 등 1:1 전자감독 내 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2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앱' 기능 지속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시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적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과제 목표 설정시 도전적 목표치 설정(시행계획 수립 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협업 강화 및 성과 적극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26. 4.)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련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정책 홍보 실시('26.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소년원(대전·안양) 시범 운영('26.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환경 개선 정책과제 이행 및 국민 체감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정신감정 재시행 및 여성병동 추가 운영,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시('26. 3.) ○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시(연중)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전문프로그램 확대 및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중독치료 전문 강사풀 구성 및 심리치료 연계 확대(연중) ○ 고위험 대상자 지도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선직원 전문교육간담회 실시(연중)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기업 우대혜택 확대 필요 ○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사회적 일자리기업 입찰 가점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우대혜택 도입 추진(연중) ○ 우리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여신금리 우대혜택 도입을 추진하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추진(연중) ○ 재범고위험군 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분기별 집중사례관리팀 사례회의 실시(연중) ○ 재범고위험군 적정 관리를 위한 집중사례관리팀 운영 매뉴얼 TF 운영 및 제작(연중) ○ 재범고위험군 관리 협조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단교장·보호관찰 분기별 3자 협의회 추진(연중)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 추진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체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 추진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카드뉴스 상·하반기 발간으로 적극 홍보(연중)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시 '25. 10.부터 시행 중인 「전국 교정기관 폭행사고 실태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에 따른 폭행 피해 예방 이행 여부 철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피해 우려자 및 폭행 피해 가해자 지정, 집중관찰 상대, 폭행 피해 신고환경 개선 여부 점검을 통해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 예방('26. 3. ~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 간담회 지속 실시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리서치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노력(연중)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보고 싶고,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고안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책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등 범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홍보 다각화 추진(연중)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조성 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의 노력 필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설명자료 배포, 주민간담회, 설명회 개최(연중)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본부 SNS 구독자 및 조회수를 늘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자카드뉴스 등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정본부 SNS 가입 및 활동 독려('26. 4.)

20	○ 스마트 접견 확대를 위한 합리적 예산 분석 및 책정	○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분석 및 업무 자동화 BPR/ISP'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재분석 후 합리적 예산 책정(하반기)
	○ 변호인 스마트접견 수요 증가 대응	○ 변호인 스마트접견 24호실(12개 기관) 증설(하반기) ○ 변호인 스마트접견 보안성 확보를 위한 성문 인증시스템 도입(하반기)
	○ 관리과제 및 지표산식 변경	○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산식 변경(시행계획 수립 시)
	○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 실시 홍보	○ 방송매체(언론 등) 홍보 실시(하반기) ○ 대한변협을 통해 법조인, 로스쿨 학생 등 홍보 실시(하반기) ○ 전국 소속기관 배너 등 홍보물 설치(하반기)
21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3자(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한국보호법무복지공단) 간 간담회 개최 추진(연중) ○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 연계공유를 위해 경찰청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등과 실무회의 추진(연중)
	○ 분류심사가석방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방식 다양화	○ '월간 교정' 등 정기간행물에 '25. 수형자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에서 발표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다면적 평가 사례 기고(연중)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 리플릿 배포 및 보라미방송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연중)
22	○ 정신질환 수형자 증가로 맞춤형 직업훈련 마련	○ 직업재활훈련 개설 및 시범 운영('26. 1.)
23	○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제고	○ 성과관리 신규 지표 수립(시행계획 수립 시)
24	○ 정책 홍보 노력 부족, 성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효과나 수치 제시 필요	○ 성과지표의 효과 및 수치 제시가 가능한 지표 발굴 및 재선정(시행계획 수립 시) ○ 의무관 결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언론 홍보 및 의료단체와 소통 확대(연중)
25	○ 고위험 범죄자 증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심리치료 수요에 비해, 치료 프로그램 정책을 운영할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 부족	○ 법무부 소속기관 심리치료 전담 기구 신설 및 인력 확대 추진(연중)
26	○ 마약류사범 특성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필요	○ 마약류 가상현실 중독재활 프로그램 도입(연중) ○ 여성 수형자 마약류 프로그램 개발(연중)
	○ 객관적인 중독재활 효과성 확인 필요	○ 뇌파 측정기 및 뉴로피드백훈련기 도입(연중)

27	○ 정책 효과 개선 필요	○ “계약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26. 6.) ○ “계약법” 뿐만 아니라 “담보법”, “권리변동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 분쟁 해결 등 정책 효과 제고 예정(연중)
	○ 홍보 노력도 개선 필요	○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 및 홍보실적 개선 예정(연중)
28	○ 공증 제도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항목을 점검하여 성과지표의 질을 제고하고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	○ 공증 제도개선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별 검토 및 반영할 예정(시행계획 수립 시)
	○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국민체감성 제고 필요	○ 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공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민체감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시행계획 수립 시)
	○ 수요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전자공증 수요가 높은 기관 및 장소를 타겟으로 하고, 주요 수요층이 접근하기 용이한 홍보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홍보방안 마련 예정(연중)
29	○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각 단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국가소송과를 컨트롤 타워로 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	○ 검찰청 및 각 소송 수행청과 환수 내역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여 판결 확정 후 실제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지원 및 감독을 확대할 예정(연중)
30	○ 지속적 홍보 노력 필요	○ 홍보 대상 발굴연구 회의(*26. 3.)
		○ 홍보 실적 창출(연중)
31	○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의 충실성 개선	○ 2026년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절성 개선 제고 및 추진 일정은 대외적 변수 고려하여 수립 예정(시행계획 수립 시)
	○ 협업 노력도 개선	○ 협업 노력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의 내실화 예정(연중)
	○ 홍보 노력도 개선	○ 다양한 홍보 매체 발굴, 적극적 홍보활동 강화 예정(연중)
32	○ 최근 실적 검토 및 유사 사업 성과 수준 비교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최근 실적 추이 및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시행계획 수립 시)
	○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 실시	○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 추진 예정(연중)

33	○ 시험관리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계획 검토수립 및 예산 확보(연중)
	○ 시험제도 개선	○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의견 청취(연중)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진행(연중)
34	○ 내실 있는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일본 법무성과 양국 국제중재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식 서신 교환('26. 5.)
		○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캄보디아 조정인 대상 합동 현지 세미나 개최('26. 2.)
35	○ 해외진출기업 현지 설명회 등 업무 협력 강화	○ 일본, 호주 등 현지 법률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현지 법률지원 설명회 개최(연중)
	○ ISDS 예방대책 강화	○ KOTRA와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민원 관련 ombudsman 제도 모니터링 체계 정비('26. 3.)
36	○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알림 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 지속 노력	○ ISDS 관련 알림자료 등 배포(연중)
37	○ 전자여행허가(K-ETA) 통계·분석 시스템 관련 AI 기술 활용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입·추진 필요	○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국정과제)을 위해 AI K-ETA 시스템 도입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신청 예정(연중) ※ 향후 AI를 활용한 전자여행허가(K-ETA) 통계·분석 시스템으로 수집 정보를 자동분석 후 정보 제공('29.)
38	○ 지속적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성 하에 유관부처와 협의 노력 강화 필요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간담회 등 개최 예정(연중)
39	○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제도개선 예정(상반기)
	○ 보호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평균 보호기간 지표에 대해 중장기적 목표 설정 필요	○ '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예정(시행계획 수립 시)
40	○ 목표치가 단순히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 건수로만 산정하고 있어, 연계 실적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유관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주요 시스템 연계에 대한 업무 활용 실적 조사를 실시(연중)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와의 협업 확대를 통한 정책 접근성 및 인지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정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프로그램과의 장기 협업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보도 설명 자료만으로는 정보 전달이 부족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경우 많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활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형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배포(상반기) ○ 보도설명 자료 배포 방식을 확대하여, 카드뉴스와 동영상 제작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상반기)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정책 수립(개선)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의 협업활동(실적) 강화 등(연중)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 협업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정책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연중)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부처와의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증진협의회' 및 권익구제 창구 활성화 추진(연중)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을 위한 처우지원 활동 지표의 10개 구간 설정 기준 개선 필요 ○ 처우지원 지표 추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상반기)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홍보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 단계에서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연중)